

2009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Obama, Can It Work?

Guy Sorman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in a Time of Global Crisis**

Jeffrey J. Schott



IGE 세계 경제 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후원

SAMSUNG

삼성전자

Guy Sorman

문명비평가이자 작가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수많은 저서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 지성인.

프랑스 총리 자문위원장 역임. Stanford대, Beijing대, Moscow대, Paris대 등의 교수로도 활동하였음.

“Economics Don't Lie”, “The Empire of Lies”, “Made in USA” 등 저서 다수.

Jeffrey Schott

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연구위원.

미국 재무부 국제무역 및 에너지 정책부서를 거쳐 Princeton대, Georgetown대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정부 무역 및 환경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임.

“Free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등 주요 논문 및 저서다수

2009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Obama, Can It Work?

Guy Sorman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in a Time of Global Crisis**

Jeffrey J. Schott



IGE 세계 경제 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후원

SAMSUNG

삼성전자

머리말

이 보고서는 2009년도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에 특별히 초청된 프랑스의 지성 Guy Sorman씨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연구위원 Jeffery Schott씨의 특강내용을 질의·응답과 함께 정리하여 편집한 것이다.

Guy Sorman씨의 특강은 올해 초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지난 3월 19일 “Obama, Can It Work?”란 제목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Jeffery Schott씨의 특강은 지난 9월 하순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7월 21일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in a Time of Global Crisis”란 제목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두 강연자 모두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석학들이라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Guy Sorman씨는 파리정치대학에서 오랫동안 경제학 강의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수많은 저술활동을 통해서 명성을 얻었고, 프랑스의 Le Figaro 및 미국의 Wall Street Journal의 고정 컬럼니스트로도 활동한 바 있으며, 90년대에는 프랑스 총리 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을 뿐 아니라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었다. 2008년에는 “The Economy Does Not Lie”라는 역작을 내놓았다. 한편 Jeffery Schott씨는 일찍이 1970년대에 미국 재무부에서 국제무역 및 에너지정책 담당관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1980년대 초 이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근무하면서 미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수많은 저작물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NAFTA 등 주요 통상정책 수립에도 깊이 관여하여온 국제경제 전문가이다. 현

재 미국 정부의 무역 및 환경정책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두 강연자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Sorman씨는 올해 초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경제 및 대외환경을 짚어보고 이들에 대한 대응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그는 비록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은 연속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77합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태평양에 머무를 것이고, 미국의 대 북한정책도 결코 유향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문제의 열쇠는 평양이 아니라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제문제와 관련한 그의 비판은 매우 신랄한 편이다. 우선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1930년대의 불황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그는 보고 있다. 실업률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회안전망 등 복지제도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정부가 이자율을 0%로 낮추고 정부가 산업체(자동차 등)와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경제적 차원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부양책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 지난 90년대에 일본에서 보았듯이 - 소비가 아니라 저축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만약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에도 그것이 결코 2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 한계를 벗어나면 단순히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하게 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미국이 10% 이상의 재정적자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그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정부 부채를 갚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달러화

가치는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

Sorman씨는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현재의 위기타개책은 진정한 근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기의 근원은 파생 금융상품의 남용이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방치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여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가 침체로부터 구제된 것은 부양책보다는 결국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생산업체 및 금융기업에 대한 직접적 정부 개입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역동성과 쇄신노력을 몰아내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만을 높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기술혁신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Sorman씨는 최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래를 오히려 밝게 보고 있다.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과 연구실, 그리고 훌륭한 산학협력을 통해서 세계의 성장을 주도해 왔으며 비록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세계에는 미국을 대체할 만한 리더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결코 미국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Sorman씨는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조금씩 태도를 바꾸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유무역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표류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한국의 로비 활동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Jeffery Schott씨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시기에 한-미 양국이

어떻게 협력하여 세계는 물론 양국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를 주의 깊게 탐색하고 있다. 그는 우선 세계경제가 최근 바닥을 쳤고 조만간 회복 국면에 들어가리라는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무역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행히 2008년 11월에 한국이 제창하여 채택된 소위 스탠드스틸(Standstill)선언 - 새로운 무역장벽을 금지시키는 - 은 그 동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두 가지 이유로 보호주의 압력이 점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나는 세계경제가 비록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 해도 당분간 실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을 시도할 때 각국의 정치인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에 특혜가 가도록 - 최근 미국과 중국의 행태가 보여주듯이 -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WTO 제도의 미비점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하라운드(DDA)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G-20 정상회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이익과 필요성을 지닌 분야로 그는 기후변화 문제를 들고 있다 기후변화의 경제적 문제는 전에는 공짜였던 탄소의 가격을 상품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탄소 가격의 수준은 산업생산의 구조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간에도 자원의 재분배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계적 관리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최근 “녹색 뉴딜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녹색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으로부터 오는 불이익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Schott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앞으로 9개월 내에 미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세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유로 그 동안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자동차 산업이 최근 1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그는 최근 한국과 EU간에 타결된 자유무역협정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의회가 비준을 지체함으로써 미국이 협상의 이익을 거두기도 전에 유럽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익을 차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로 Schott씨는 최근의 북한 상황을 들고 있는데, 북한의 위협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줄 것이고 이는 사소한 통상 문제를 압도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의회의 의견을 지지 쪽으로 돌려놓을 것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다. 만약 그의 예견이 실현된다면 늦어도 내년 11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한-미 FTA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 보고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빛을 보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특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윤우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9년 10월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남 종 현

차 례

머리말	3
Obama, Can It Work?	11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 <i>Guy Sorman</i>	
번역문	39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in a Time of Global Crisis	63
한-미 경제 파트너십: 세계적 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i>Jeffrey J. Schott</i>	
번역문	95

Obama, Can It Work?*

Guy Sorman

Mr. Chairman and dear friends, for me it has become like a ritual to be invited to your breakfast lecture when I come to Korea. In the past few years I have had many opportunities to talk about various subjects. I've talked about China, and also I have talked about the United States. Probably I was too optimistic at that time, but I make mistakes. We all make mistakes. Economists, particularly, make a lot of mistakes. Economists are really bad at predicting the future. We don't know how to predict the future.

But, if I remember well what I said some years ago about the US economy – I wouldn't change this – that fundamentally the US economy was and still is, in spite of the crisis, the leading engine of growth. In terms of innovation, thanks to their excellent universities, laboratory research, thanks to their excellent cooperation between academics and the business community,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 the lead since the 20th century. We don't see right now, despite the crisis, any real challenge that would modify this leadership. We all accept it in a way. Whether we like it or not, we accept it because we all know that the whole world will get out of the recession on the very day that America gets out of it. There is no hope to get out

* Transcription of a speech given at the IGE/Samsung Electronics Global Business Forum on Thursday, March 19, 2009

of the present situation if the US doesn't do it first. This is proof that the US still maintains its leadership.

Another paradox of this crisis is the strength of the US dollar. In a time of crisis, what do people want? They all buy US dollars. The US dollar is stronger than it ever was, and the whole world is buying US treasury bills. This has consequences, as we will see in one moment, on the choices that have been made by President Obama because when you can print your own money and when you can borrow without limit from the rest of the world, this gives you some kind of freedom that other countries like Korea and France do not have. So, this has some influence. This influence may be positive, but it may also be negative in the long-term. I have written a text for this conference in English and I would the text, if possible, to be translated and distributed in Korea in the coming days because it is long and detailed and I don't have time to go through it all this morning. I will make some remarks based on this text, but if you're interested I think the organizers will be able to distribute the text that I have written for you. As the chairman started, and rightly so, with foreign affairs and the threatening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before I turn to economics, I will make some quick remarks on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Very clearly, I believe and maybe some left-wing commentators in the United States wouldn't agree with me, the choice of the new administration has been continuity. The Secretary of Defense is the same, and the top military brass is the same. From the very first day, Barack Obama has said that he would rely on the advice of the top

military offices starting with General Petraeus who was in command of the War in Iraq and is now in charge of the War in Iraq and in Afghanistan. This means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not opening any debate on the role of the US in the global or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us considers the US as a nation and the US military should keep its role as a global peacekeeper and that there is no substitute for the US military to keep peace in the world.

There was some hesitation because among the democrats you have some pacifists and you have some people who doubt the role of the US military and they wonder why they should keep the huge 7th fleet in the Pacific Ocean, why they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US soldiers in Afghanistan, but this debate has become marginal. The 7th fleet is here for good and will be here for a long time and the military presence in Afghanistan and other dangerous parts of the world are being reinforced. *Vis-à-vis* North Korea, I think it is really clear following Secretary Clinton's discourse and declaration that there won't be significant change toward North Korea. Similarly, there will be no significant changes *vis-à-vis* Iran. So, the American policy will continue, it will be tough, but I'm not sure it will be very successful because it has not been that successful for many years.

At least, there won't be a tendency to be soft *vis-à-vis* North Korea. I don't want to elaborate on this problem of North Korea. I've told my position quite often to the Korea media. The key is not in Pyongyang; the key is in China. As long as you don't find a way to deal with China, you'll never find a way to deal with North Korea. Enough of that because it is not our topic this morning, but I just

wanted to insist on the continuity of some enemies of the United States would say the continuity of American imperialism. Obama is an American imperialist. An American President first used the term “imperialist” as far back as the 1800s by Jefferson. Jefferson said that the United States was the empire of liberty. Since the very beginning, the US has seen itself as an empire with an imperialist vocation. They see their role as a positive imperialism. They see the role of the military as extremely positive.

If I may add one remark on the US navy, I very recently visited the headquarters of the 7th Fleet in Hawaii. One of the Admirals, the head of the 7th Fleet, told me that the pride of the 7th Fleet is that since WWII the fleet has never fought in a war and, therefore, proves the importance of the 7th Fleet. The Pacific Ocean is quiet. Trade can continue because the US Navy is here. President Obama has no intention to change the role of the US military in this part of the world. I wanted to say that, which I think is quite significant, quite important, and quite positive.

If we turn to the economy, the chairman said in his introduction and everyone agrees that this the most severe recession since 1930. It's severe but it is not to be compared. It is not to be compared because as he mentioned the growth might be negative this year and next, but even though it isn't pleasant to have negative growth by two, three or four percent, the situation in the 1930s saw production in the US and Europe decline by more than 40 percent. When we talk about unemployment, in Europe, for example, we live with 10 percent unemployment on a regular basis but maybe now we'll reach

12 percent. That's not very pleasant. The United States might reach 8 percent by the end of the year. Once again, this has nothing to do with the situation in 1930s when half of the people in the US didn't have jobs. We are not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It is a recession; it is a crisis; it is not the end of the world; and it is not the end of capitalism. It is not the crisis of capitalism, but it is a crisis within the capitalist system. It destroys part of the wealth; it destroys jobs; and it puts many people in a difficult position. But compared to the past, we now have a kind of welfare system throughout the world that prevents people from falling into complete poverty. In Japan and Korea, you have started to give direct help to the poorest people who are most impacted by the crisis. This is certainly the thing to do to help the poorest people in order to save the system.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doubt that President Obama is very much in favor of maintaining the free market and the capitalist system. He has repeatedly said this on a very frequent basis because he has been accused by the Republican Party to be a socialist. To be called a socialist in France is a compliment, but to be called a socialist in the United States is really negative. President Obama has been very cautious by repeating that he's on the side of capitalism, on the side of the free market, and is certainly not a socialist. Everything that he does, including state intervention and regulation, is to save the system and to help capitalism rebound. Some skeptics believe that he's a hidden socialist. I personally think that he has no clear idea about economics. That's for sure. He basi-

cally thinks the system is good. The system is American and it's adapted to US culture. He is not planning on changing the system.

How is he doing if we go into some of the details? We have to start with the stimulus. The huge stimulus in the United States is quite an ideological revolution in a way because since Reagan was in office, the market was supposed to adjust spontaneously and that state intervention was supposed to be extremely limited. This face of the faith in the automatic adaptability of the market seems to a certain extent to have disappeared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 This disappearance is for good reason. It is true that the monetary policy advocated by the classical liberals does not work. Even with zero percent interest rate nothing happens. The classic instrument of economic policy doesn't work. Therefore, what is left for the state is direct intervention by the stimulus and also – we'll come to it in a while – direct intervention by the recapitalization of industrial companies and financial companies.

The problem with the stimulus is the following. First, if we look at economic history, stimulus has not worked. We don't have one example where a country has been saved by stimulus. What usually happens with stimulus, like the many that were applied in the 1970s everywhere and in Japan in the 1990s, was that people kept pouring money into the economy and nothing happened. Sometimes the economy recovered; sometimes it did not. But, usually recovery is not connected with the stimulus because very often the economy recovers before the stimulus reaches the people. So, the connec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recovery on the one side and stim-

ulus on the other side, has never been proven. This does not mean that this time it will not work. One of the arguments by one of the economists supporting Obama is that the stimulus in the past didn't work because they were too small. If you have a huge stimulus – a big shot in the arm – because of the very dimension of the stimulus, it will restart the economy. I'm not sure about that. No one is sure about that. As the chairman mentioned, what we see as soon as the stimulus started, people increased their savings, not their consumption. Therefore, the stimulus increases savings, which aggravates the crisis because if people save, they buy less and less. The production, therefore, goes down and it impacts countries like Japan and South Korea. The stimulus might have negative effects. In the short term, stimulus packages are neutral. Maybe they create jobs here and there, but maybe these jobs would have been created anyway. It cannot be proven. So, basically, I think the stimulus plan has a political dimension. It is to show to the people that the government is acting; it is in charge; it is doing something. From a classic economic perspective, the best solution in this kind of crisis is to do nothing. In a democracy, to go on a television show and tell the people that you're not going to do anything because this is the best way out of the crisis would not go very far with the people, including the South Korean people. So, politicians have to act. Stimulus packages are neutral. They can create problems in the long-run, two kinds of problems.

If you go on for too many years, like Japan did in the 90s, public spending will replace private investment. There is now a consensus in Japan among economists that a stimulus package is okay for two

years, two years would be a maximum. If you go beyond that, you create a new economic system where you have no reason to work, and no reason to invest. You just wait until the government provides the jobs and the profits. So, if you implement a stimulus too long, you can really destroy the engine of growth. This is the advice that the Japan government has given to the European states and America. At the G20 meeting, this will be the dominant discourse of the Japanese. If you want to avoid “The Lost Decade” as in Japan, you’d better shorten the life span of your stimulus. The second risk in the stimulus package, as we know, is inflation. So far, the United States is protected from the threat, but they are the only one. Because they can use their own money, because they can loan it to the rest of the world, they can have huge deficits, 10% deficit this year. No other country can afford this. How will they repay the debt? They will repay the debt most likely with inflation. We know that there is nothing worse that destroys an economy and disrupts society other than inflation. The United States is using methods that might be good for them, but they are only valid for the United States. These methods cannot be copied by any other country.

The second instrument us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as you know, is direct intervention in the production industry and the financial industry. Once again, this is extremely ambiguous because if you try to save the auto industry, you do it because after the temporary stimulus the auto industry can recover and adapt to the market. The danger of this kind of intervention like stimulus is that it will go on for years and years and that the bailout of this kind of industry will replace good management and innovation. So, in a way, you can

draw a parallel between the global stimulus and bailouts of industries. It's the same debate. Do you do it short-term to rekindle the growth and allow people to adapt to a new situation or do you create little by little a new economic system that's kind of like a socialist system where dependence vis-à-vis the state replaces economic dynamism, investment, and innovation? Regarding the auto industry, I think that the bailout system will not help this industry to innovate and recover. The companies in the auto industry are only gaining time. The question would be the same vis-à-vis the banking system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e US government so far has been unable to focus on the real origin of the crisis. The real origin of the crisis, as you know, is the allowance of the size of the derivatives to escape any control. Derivatives, on a whole, are a good thing. Thanks to derivatives, which is a good financial innovation, better ways have been found to do more risky investments in more risky countries. Without derivatives, China and India, for exampl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find the necessary investments to sustain their growth. However, they have gone too far. How far? Nobody knows. This is the real problem. We know that there will not be recovery as long as this problem is not solved. The US government does not clearly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Why, because it is not that easy. It is not that easy because nobody knows the amount of toxic assets that are on the market. Nobody knows the amount and nobody knows the values of the assets. The US government, in a way, is gaining time trying to devise a system to isolate the banks that deserve to be saved and the banks that do not deserve to be saved. This process of evaluating as-

sets is extremely dangerous because no one will be able to evaluate them as long as they are not put on the market. Only the market can say. Of course, it will be extremely dangerous on the market because many banks could fail and many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fail. So what? Old industries, corrupt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at were not able to manage their risks should maybe disappear. There is no reason, no economic reason, no ethical reason to save them with taxpayer's money. What is being done with AIG for the last several months is not founded on any clear ethical or economic reason.

The government talks about systemic risk. What kind of risk? We don't know. I think that the Treasury Secretary, Mr. Geithner, should stop making contradictory statements and signals on a daily basis. As long as he is not able to make a decision and choose one way, the crisis will continue and the trust within the financial system will not be reestablished. When you say this, and many columnists write about this in the United States, the reaction by the Obama administration is to say, "we have only been here for two months," which is true, but this should have been the first decision to be made. All the rest could wait. The stimulus could wait. The bailout of the industries could wait. The way you manage the toxic assets cannot wait. There are other signals or policies in the Obama administration which are not that favorable to the business community, as you know: raising taxing, attacking the ethics of the business community, criticizing the bonus system, and condemning the immorality of the business community. The business community doesn't like that of course. There is kind of a populace discourse which could have consequences in the United States, but we don't know. It's too early to

know. There is an anti-free market, anti-entrepreneur, anti-business discourse which is quite new in the US history, even coming from the Democrats, and we don't know where it will lead.

As we now turn to free trade now, there is a lack of commitment from the Obama administration toward free trade. It is very ambiguous to say the least. It is very ambiguous, I think, for the same reason that they are not able to make a decision vis-à-vis the banking system. The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is very divided on this issue. The Democratic Party is not a unified party. It's a collection of individuals who have very different views on the economy from the most leftist to the most conservative views on the economy. During his campaign, President Obama was very much anti-free trade. We all understood that that was a way to buy votes in the industrial regions of the United States like Ohio or Pennsylvania that were decisive in this election. Since he was elected, he has changed his position a little bit. Recently when he was in Canada, he said that he did not intend to revise the NAFTA with Mexico and Canada. This was part of his platform. He said that's over – so back to a more free-trade classical position. Then on the backburner, there is the Colombian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Korean Free Trade Agreement.

Then President Obama made a very dangerous decision. He said that the NAFTA whether good or bad for the United States, he didn't know, should be decided along with the Korean and Colombian FTA by the American people. My God, I wonder what will come out of this kind of debate because evidently you'll have strong lobbies and

strong voices against these free trade agreements. The consumer who would be the main benefactor of the free trade agreement has no voice. He's not organized. The United States will be in a similar situation like in the 1980s when the automobile lobby opposed Japanese cars. However, Japanese cars were popular enough among the US population that the Detroit lobby was overtaken by the consumer. In the case of Colombia, will the consumer say, "We want Colombian flowers and textiles?" They don't know what comes from Colombia. I'm a bit afraid that it's the same with Korean products. They do benefit from Korean products, but they don't know it is Korean or Korean products are not clearly identified as Korean.

I would suggest that South Korea starts lobbying in favor of the free trade agreement. Well, you should start lobbying in Korea first, if you want to avoid another candlelight vigil. You have to explain to your own people the benefi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Europe and with the United States. You will also need to lobby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This won't be a simple task. You cannot just wait and hope that the Korean government earns public support; you have to work at it. In the case of France or Europe, there won't be a popular action against the free trade agreement, but who knows? Maybe some industrial lobby will discover that there will be a lot to lose with this free trade agreement. I think that South Korea should be extremely cautious with this free trade agreement with Europe, which will be announced and confirmed in London at the G20 Meeting. It will be a strong signal to the world that South Korea and Western Europe are committed to free trade and that in the midst of this crisis, the best political act that can be implemented is a Free

Trade Agreement. This European-South Korean free trade agreement, which will be on April 2nd – if I remember the date well – is extremely important. It will be a signal to the United States, but it should not preclud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 community to be actively lobbying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the Korean public opinion.

I'd like to quickly discuss some other aspects of Obama's economic policy. I don't know if we should take them serious or not. I mean, will it change the American economy and the global economy or is it only discourse and rhetoric? I'm talking about "green jobs" and "alternative energy." If you ask me what green jobs are, I frankly don't know. If you ask me what an alternative energy is, I can tell you that it's an energy paid by the taxpayers. So, I know what is an alternative energy. We don't know how far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go into this kind of direction to support alternative energy and green jobs. I think this is pure rhetoric and it will be a fad that will go away quite rapidly.

Eventually, if I were to conclude on this, I would repeat what I said at the beginning about the paradox of this crisis: It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and it will end in the United States. It has shown the fragility of the US economy, but it will not replace the United States with a new leader or a group of leaders. It has also shown the ambiguity of the US dollar as a currency that is completely unpredictable but no other currency, not even the Euro, is in a situation to replace the US dollar as a safe currency. Those are all products of the crisis. We are at the very beginning of it. We are learning on

a daily basis. We have to revise all of our textbooks. Many things have changed. The federal bank in the United States buying commercial paper that was not in the textbook. We never imagined that it could be in the textbooks. However, we don't need to change principles. One of the risks of the crisis is that people due to stress and anxiety forget everything that they learned in the past. For example, the French love ideological debate with statements like, "This is the end of capitalism," "This is the end of the free market," "Let's reinvent socialism." People forget very rapidly basic knowledge. This is why it is extremely important not to forget the basic knowledge and basic principles. Korea has become a rich country because it respected some basic knowledge and followed some basic principles. You shouldn't forget this knowledge and principles because we are in a crisis. On the contrary, you must reinforce your conviction and your principles and not partake in these useless and stupid ideological debates. I regret that many economists forget their knowledge because they lose their senses because they were not able to predict this kind of situation. Thank you very much.

Questions & Answers

Q Obama advocates change. He insists that soft power will supercede hard power. However, I don't see it that way. During WWI and WWII France's soft power was greater than the Nazis', but the Nazis still invaded France. That's just one of many examples. Do you think that Obama's soft power stance will change during his term? The second question is an economic one. The Obama administration recently put some rescue money that made up 2% of GDP. A Japanese financier told me that the Japanese put 20% of their GDP over a 10-year period into rescuing their economy. So, it appears that the US rescue plan is under-funded.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Lastly, I'd like to touch on the KORUS FTA. In 2007, I went to the University of Memphis and in 2008 visited the Long Island University to give a special lecture on Asia's finan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which included discussion on the KORUS FTA. The high turnout in attendance proved that many Americans are concerned about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re worried about the US job market. Do you think the KORUS FTA and the Colombian-US FTA will pass in the US Congress and what about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 Thank you for bringing up the soft power issue. The Obama administration foreign policy and military policy are basically the same as George W. Bush's policy, but you cannot say that. So therefore, they came up with the idea that it's not the same policy because they put more emphasis on soft power than on hard power. This was a way to show change without actual change. You are perfectly right that soft power cannot be implemented by a government. It's like cosmetic rhetoric to hide the fact that there is continuity.

Concerning the stimulus – I mean we have talked about it – there

is an open debate among economists going back to the 1930s. You have economists like Paul Krugman saying that it didn't work in the 1930s and it's not going to work now because the stimulus is too small and that it should be much bigger. How big? We don't know. If it's too big I think there is an underestimation of the inflationary risks, maybe I'll come back to that later in more detail.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crisis there was a very loose monetary policy. If we go back to a loose monetary policy, we won't only not solve the crisis but we will repeat the very cause of the crisis. Will the FTA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 approved in both states? I think yes because if you look at the long history of free trade in the long run, you always have vociferous groups against free trade but eventually there is a common sense which triumphs and eventually most FTAs get approved in other countries where they have been presented. Since WWII all of the free trade agreements have been approved even if it takes time.

Q Thanks very much for sharing your wisdom. I have two questions. One is related to a pessimistic quote about the economy and I would like to have your thoughts on the matter, and the second one is related to the US dollar exchange rate. I recently read an article that argued that the recession was caused by American credit debt. It said that the total US debt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was 51 trillion dollars as of June of last year. It further says that in the past 100 years America's credit debt was 150% of GDP and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t was 250%. This author suggests that the only long-term solution is for Americans to save more and spend less.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opinion? Secondly, despite such a big American debt, the US dollar is getting stronger. I believe America is in a unique position by benefiting as the key trading currency

status. Once the financial crisis is over, once people get over the horror of credit risks, and once stimulus packages are implemented, places all around the world will see inflationary pressure. That pressure will be stronger in American than in other countries. This could create a scenario with rising interest rates in America and precipitating exchange rates.

A Starting with your second remark, I tend to agree with your hypothesis. Another paradox is that when the recession is over, the US dollar will go down because we will have less of a reason to invest in a safe currency. Those are only hypotheses because if there is one thing that we can't predict it is the evolution of exchange rates. We don't have any mathematical model that can accurately predict this kind of behavior.

On your first observation, you said that the long-term solution would be for Americans to save a little more. Yes, to certain degree because, as you also said, we need America to have debt. There is a right level of debt in a way. When they start saving, like now, they don't buy. They should save but not too much. What is the right level of debt? If they have no debt at all, they are not the engine of the world economy anymore. If they have too much debt, they put everything into a recession. If they don't have enough debt, they can also put the world into a recession. The right level of debt is difficult to evaluate. This directly relates to the interest rate policy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I'd also like to add that if we were to write the history of the current recession, it really started with the really low interest rate after 9/11. Of course, with all recessions there are several combinations of

parameters involved. This said, I consider the main reason, in spite of the huge respect that I have for Allen Greenspan, is that he was overshooting after 9/11. There was such a fear after 9/11 that the global economy would stop, that everybody would be frightened causing trade and investment to stop. The decision, as you remember, after 9/11 by Allen Greenspan and the Federal Reserve Board was to lower the interest rate to rekindle economic growth. At that time it worked. It worked so well that the Federal Reserve Board didn't feel that they needed to raise the interest rate at a certain moment. They didn't do it because there was an enthusiasm during that period because of the high growth rate in the United States. Everybody was making money. The whole world was growing. On top of this loose monetary policy, which made credit available for everybody at a very low rate, you had a huge influx of foreign capital from Russia and Arabic countries because of very high oil prices, some from China, Japan and Korea. The US financial system was really flushed with money at a near zero percent interest rate. Speculation was a consequence of this loose monetary policy because today the main political discourse is to say that we were too greedy, too many speculations, and the bubble burst. You have to ask yourself how was the speculation possible, why did the people become too greedy. The reason is that when a society is flooded with money, and when there is no more notion of what an interest rate is, then, I would say, greed in any society can do harm because of the super abundance of money as was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it's not greed but loose monetary policy which is at the origin of this crisis and it will be extremely disastrous for the sake of stimulating the economy for there to be once again too loose of the monetary policy in the US.

Q In the case of the French Revolution, the court was in heavy debt, the Meeting of Estates-General was convoked and there was a revolution. Maybe, that's a bad analogy, but would a proletariat of nations rise against the US? Also, I think the US hegemony won't last forever; at least it will have to be revised. So what will be the role of Obama's presidency in that evolution of the US hegemony in the world?

A Nobody has decided this hegemony. It's just a consequence, an outcome of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s always been lots of dissenting voices on the role of the US as an empire. Still today, you have plenty of dissenting voices in the academic and political community, but why should the US be responsible for the rest of the world? It has just happened like that. It was not a choice. This is important because the US became an empire nearly by accident. The Roman Empire wanted to build an empire. The Chinese Empire wanted to build an empire. The United States became an empire. It was never really a choice. Therefore, there won't be a debate within the US where the Americans will say that they don't want to be an empire anymore. Two things can occur. First, will there be an anti-American revolt? Well, we have that on regular basis from time to time. In the case of the Obama Presidency, Obama's charisma protects the United States, I would say, at least for four years. Obama as a person is very charismatic and is respected all around the world. We are also in an economically integrated system and you need a kind of global government. So the question is, what will be this global government? Will one nation replace the United States? Clearly, in the short-term the answer is no. No nation has the economic resources or the political desire to be the global cop for the world. It costs a lot of money. The Chinese don't have the economic or mili-

tary resources. The Europeans don't have the will; they are not interested, good life first. So, there is no nation willing to replace the United States and you need a global cop. If the 7th fleet were to disappear, who would replace it? No one is volunteering for that. We'll probably see an emergence of a semi-global government. The G8 will disappear. I'm quite sure that the next G8 meeting in Italy will be the last of its kind and that the G20 will replace it for the years to come. This is an enlargement of this kind of global government where the US will remain the leading voice but is mitigated by the strong presence of other countries. I think this is the direction we are going, but nothing as dramatic as the French Revolution.

Q About five or six months ago you came to this breakfast lecture just after the financial crisis broke out in the US. At that time, you said that you firmly believed in the fundamentals of the American financial system. At the beginning of your lecture today, you said that you made some mistakes. By mistakes are you referring to previous predictions that you made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American financial crisis? Also, do you still believe in the fundamental in the American financial system? Secondly, these days American news media reports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financial crisis in the 1930s and the present one. A few days ago, an American television network reported that people are living in a wealthier state now than compared to the 1930s. So what are som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recessions?

A I regret that you were there last time and you remember what I said. Right after this breakfast conference in Seoul last time I was here, I said to myself that I was a bit too enthusiastic and I should have been more cautious. My mistake, like many others, was that I

underestimated the seriousness of the financial crisis because I didn't know that all of the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ll around the world were loaded with toxic assets. At that time, we didn't have enough information. Toxic assets were thought to be a problem only in leading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t was discovered that it wasn't just one bank. This has been discovered little by little. As we said before, we still don't know the entire story today. We don't know the value and we don't know the entire dimension of the crisis. We now know that we have derivatives based on derivatives. It's an endless process. So that was my mistake based on the lack of information.

One of the lessons that I think we should retain from this is not that we need more regulations – regulation was there – the problem is elsewhere. The problem is the lack of information. I compare the toxic assets sold by the bank to medicine. When you're severely ill you buy a pill. You know that it can cure you but maybe it can have bad side-effects, but at least, it is written down on a piece of paper or a doctor who can explain the benefits and risks to you. In the financial sector, I don't think the solution is regulation. It's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The state should intervene by not adding regulation because they will be incapable of applying regulations or if the regulations are too strict they will kill innov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The way out is really transparency of information so that we know ahead of time what we are going to buy.

As for the other fundamentals in the long run, they all still exist. They include the capacity of innovation, the capacity of bringing in-

novation to the market, the capacity to attract the best research from all over the world, the good cooperation between academics and business. There is no equivalent still today of the US as an economic engine. In the medium-run, I'm quite sure that the American industries are going to have a spectacular renaissance. When you go and visit research labs in the US, it's impressive to see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coming years. Everything that has to do with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 these take place everywhere – but it's going to be marketed first in America. Despite the crisis, we are on the verge of a new industrial revolution. All of the new products and techniques are there. This trend toward innovation has been disrupted by the financial crisis. When the financial crisis is over, all of the new products, methods, technologies will be ready. They just wait for the right financing and the restart of the economic process. We have to remember that the growth of the economy is mainly due to innovation. There is no other growth engine like innovation. This is why I should say that the fundamentals are still okay. In one word,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1930s and today is that in the 1930s two-thirds of mankind lived in agriculture and was in a way protected from the crisis. In a country like France, for example, the crisis was bad but not that bad because in the 1930s 50 percent of the French people still lived in agriculture so the impact of the crisis was moderate. It was stronger in Germany because it was a more industrialized country. These days even agriculture is impacted because agriculture is on the world market. So the big difference is that today everybody is impacted; there is no shelter; there is no place to hide. This is a big difference. Another difference is that most countries have a welfare system. Therefore, the impact of the crisis – except

for places like Africa – doesn't destroy the lives of people to the same extent as in the 1930s because of the welfare state and state intervention. Finally, the big difference is that we know more about economics today than we knew in the 1930s. Many of the huge mistakes committed in the 1930s like closing borders, forbidding the creation of new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nd imposing monopolies are not being followed. In the 1930s it looked like the right thing to do. Today we know that there has been progress in economic knowledge. We know that those policies were mistakes. This has tremendously helped to not aggravate the recession and not to repeat the mistakes of the 1930s like the New Deal, which has been an aggravating factor of the recession.

Q Recently, US secretary Rubin was here three or four weeks ago to participate in a global seminar orga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celebrate the one-year anniversary of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He's, in fact, the culprit of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inventor of repackaging derivatives. He has never made an apology for making such a financial mess. He said that he didn't recognize the implications of constant repackaging derivatives. You said that you didn't recognize the implications as well. Nor did I. All of the economists are on the same boat.

My first question is related to the KORUS FTA.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ruling party – are waiting to see what happens in Washington. Our national assembly is almost ready to ratify the FTA, but now the opposition party is unsure about ratifying the FTA first. My own position is that despite such ambiguity by our American counterparts, we should go ahead and ratify the FTA and put the ball back in America's court. I would like to hear your view on this. In fact, you said that Korean-EU FTA will provide a very good position for Korea to proj-

ect our image as a liberalized country in the global community. Taking this into account, I think that Korea should ratify first. As for my second question, you said that Korea should lobby very hard in the American market because American consumers are not aware of Korean brand names. How can we approach this? How can we deal with the US consumers advertising Korean products? Of course, Hyundai Automotives is using the precious time during the Super Bowl to advertise its own products. That is one way of doing this, but what is the general approach to enhance Korea's product image to the US consumer? Finally, you said that while the crisis is still going on, we should get prepared for the post-crisis system and we should look for a new robust search engine. In this context, I believe that Korea has no serious problem. We are pioneers in stem-cell research, but unfortunately, we had this Dr. Hwang scandal.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suspended expenditures of the budgets for stem-cell research. Now, just a few weeks ago, President Obama gave the go ahead to do stem-cell research. This has spurred on the UK, France, and Germany to race into the field. What is your view? I think we should allow the resumption of stem-cell research.

A On what Rubin says about the responsibilities of economists, I think economists should take the same type of Hippocratic oath as doctors where the first line is "you should not harm." Sometimes we invent products that are very sophisticated and we are absolutely delighted because they are so sophisticated. We can forget that they have consequences. But, we also make models that are quite useful. We have models to show that free trade is good and models to show that inflation is bad. Sometimes it's good and sometimes it's bad, but we are not very cautious. Economists are like scientists. They don't know how to communicate. They don't relate very well to people. They are not very good at explaining themselves. The profession as such these days is thinking really hard about the kind of behavior it

should have because, after all, we do hav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We are at the origin of certain products and these products can be toxic. We never thought about this before. I consider Rubin to be much more toxic than I am because he is much more creative. There is an ethical problem in the profession and it is being taken into consideration right now. In the coming years, this ethical dimension will be included in the profession.

About free trade, as I said in my introduction, it's not because we are in a crisis we must forget the basic principles and everything that we know about economics. We know that free trade is good. Of course, we know that it does impact certain people. It's good globally. Individually, it can destroy jobs, but this is a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people to help the people impacted by the agreement. So, I think that it's very important to keep these principles and be careful abou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se global benefits for certain categories of people. The first big mistake would be to forget about the FTA for circumstantial reasons, and the second mistake would be to forget that what is good globally is not good for everyone. This is a big problem because the adversaries of free trade will always be better at public relations than the advocates of free trade. The advocates of free trade say that it is good globally. The adversaries of free trade will select the guy in a small village who will lose his cow or shop because of European imports. There is an asymmetric imbalance between the global benefits and the negative impacts. This needs to be taken care of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candlelight vigil demonstration was a political and ideological demonstration, but the demonstrators also made some

good points. If the government had been more careful at that time, it would have communicated the benefits better. So you should not repeat the same mistakes which allowed the opponents of the free trade to have another candlelight demonstration.

To lobby the US consumer, a few days ago the Korean President established a committee to promote Korea as a brand abroad. Apparently, I am the author of this brilliant idea, but I'm completely unsatisfied with the way that it's done. Why? The President brings a committee of ten or twelve "wise men" together. These "wise men" decide to promote Korea abroad. They decide that they should put Taekwondo first; Kimchi came second and so on. There was a list of about ten good things that should be promoted abroad. This is not a good method. A good method is to go through professionals like a PR agency and ask Americans or French,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South Korea?", "What is your image of South Korea?", "What are your prejudices about South Korea?", "What do you expect from South Korean imports?". You have to start from the demand. You have to start from us and not from you. I was very happy to have a committee taking care of promoting Korea as a brand; that's good thing. I was a bit surprised by the method. It's as if Hyundai or Samsung decided the best products to sell abroad regardless of what US consumers want. I hope that they will change and that they will ask the US consumers what they expect and then build a PR campaign targeted toward these countries with each country being different.

As for the question concerning South Korea ratifying the FTA

first, simply there is no hesitation to have about this issue. You should follow your path. This is a long-term trend. You shouldn't be stopped by your current circumstances.

For the stem-cell research question, as I said before, economic growth is based on innovation. There is a general agreement that nano-technology and biotechnology are among the most innovative fields today. Clearly, Korea has an advantage in these fields. Okay, there has been an accident, but there have been accidents in every country. You should start as soon as possible. You have the facilities and researchers. Many of these researchers went to the US after this incident; you have to bring them back.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

Guy Sorman

내가 한국에 올 때 마다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에 초청을 받는 것이 의례적인 일이 되었다. 과거 몇 년간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 중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당시에 나는 너무나 낙관적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실수를 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한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이 많은 실수를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참으로 무능하다.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몇 년 전 미국경제에 대해 한 말을 잘 기억한다면 - 나는 이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 기본적으로 미국경제는 이번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엔진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미국은 좋은 대학과 실험실의 연구, 그리고 훌륭한 산학협력에 힘입어 20세기 이래 주도권을 행사해왔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도권을 변화시킬만한 어떤 도전도 발견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불황에서 헤어나는 바로 그날 전세계도 불황에서 헤어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미국이 먼저 현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 현 상황을 극복할 희망은 없다. 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증거의 한 사례이다.

* 이 글은 2009년 3월 19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임.

이번 위기의 또 다른 패러독스(paradox)는 미국 달러화의 힘이다.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모두 미국 달러화를 산다. 미국 달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강하며, 전세계가 미국 재무부 단기증권을 산다. 이것은 우리가 보듯이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에 우월성을 부여한다. 미국이 자국 화폐를 찍어내고, 다른 나라에서 무제한으로 빌려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한국이나 프랑스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영향력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오늘 강연을 위해 나는 영어로 텍스트를 썼다. 가능하다면 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자 한다. 내용이 길고 자세하여 오늘 아침 그 전체를 전부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텍스트에 바탕을 두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보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작성한 텍스트 전문을 주최측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강연 벽두에 외교문제와 북한의 위협상황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도 경제문제를 다루기 앞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미국 새 행정부의 선택은 연속성이라는데 있음이 매우 분명하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일부 미국의 좌익 논객들은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지 모른다. 국방장관도 같은 사람이고, 최고위직 장성들도 같다. 취임 첫날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전쟁을 지휘했고 지금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페트라우스(Petraeus) 장군을 비롯한 고위 군장성들의 조언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가 세계질서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하여 어떤 논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처럼 미국을 하나의 나라로 보고 미군은 세계의 평화유지자 역할을 계속해야 하며,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다소의 망설임도 있다. 민주당원 중에는 평화주의자도 있고, 미군의 역할에 회의론을 갖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왜 태평양에 거대한 7함대를 유지해야 하는지, 왜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증원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미미한 것이다. 7함대는 태평양에 충분히 오래 동안 있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의 위험지역의 미군은 증강될 것이다. 클린턴 장관의 주장과 선언을 볼 때 미국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이란과 관련해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정책은 계속될 것이며, 단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성공적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북한에 대하여 유화적인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나는 북한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한국의 언론에 나의 입장을 자주 표명했었다. 열쇠는 평양에 있지 않고 중국에 있다. 중국과 교섭을 할 방안을 찾지 못하는 한 북한을 다룰 방안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쯤이면 족하다. 이 문제는 오늘 아침 우리의 논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적들이 미 제국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연속성을 주장하고자 할 뿐이다. 오바마는 미 제국주의자다. “제국주의자”란 말을 처음 쓴 미국의 대통령은 1800대의 제퍼슨(Jefferson)이었다. 제퍼슨은 미국이 자유의 제국이라고 말했다. 건국 초기부터 미국은 스스로를 제국주의적인 소명을 지닌 국가라고 보았다. 미국인은 그들의 역할을 긍정적인 제국주의로 보고 있다. 그들은 군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 해군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면, 최근 하와이의 7함대 사령부를 방문했었다. 7함대의 한 고위 제독은 7함대의 자랑은 2차 대전 이후 전쟁에서 싸워 본적이 없다는 것이며, 그것이 7함대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평온하다. 미 해군이 있기 때문에 통상

이 계속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의 이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자 한다. 내 생각에 이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며,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이제 경제문제로 돌아가자. 사회자가 소개말에서 말했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듯이 지금은 1930년 이래 가장 심각한 불황이다. 심각하긴 하지만 두 사태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사회자가 말했듯이 금년과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해야 할지 모르고, 비록 2~4%의 마이너스 성장이 유쾌한 일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생산이 40%나 줄었던 1930년대의 미국 및 유럽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실업률을 본다면 유럽은 늘 10%대를 감수해 왔고, 이제 그것이 12%로 올라갈지 모른다.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금년 말까지 8%대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미국 인구의 절반이 일자리가 없었던 193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불황이고 위기이긴 하지만 세상의 끝은 아니며, 자본주의의 종말도 아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내의 위기이다. 부의 일부가 파괴되고 일자리가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서 세계 여러 나라는 국민들이 완전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나름대로의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도 이번 위기로 가장 타격을 받는 최빈곤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시작했다. 체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빈곤층을 돕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선호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이를 자주 반복하여 말했다. 공화당이 그를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해 왔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사회주의

자라고 불리는 것은 칭찬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자신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편이며, 분명히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되풀이 말함으로써 몸조심을 해왔다.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포함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체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자본주의를 되살리려는 것이다. 일부 회의론자는 그의 실체가 사회주의자라고 믿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가 경제에 대하여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 체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현 체제는 미국적이며, 미국문화에 적응한 체제다. 그는 체제를 바꿀 계획이 없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선 경기부양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부양책은 어떤 면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혁명이다. 레이건(Reagan) 대통령 재임이래 시장은 자동적으로 적응을 하고 국가의 개입은 극단적으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믿어 왔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장의 자동적인 적응성에 대한 믿음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 같다.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금융정책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자율을 0%로 낮추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경제정책의 고전적인 도구는 효능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국가에게 남겨진 것은 부양책에 의한 직접 개입이며, 산업체와 금융기관의 자본 재구성에 의한 직접 개입뿐이었다.

경기부양에는 여러 문제가 뒤따른다. 첫째, 경제를 되돌아 볼 때, 경기부양책은 효능이 없었다. 경기부양책으로 한 나라가 구제되었다는 단 하나의 사례도 찾아볼 수가 없다. 1970년대 여러 나라가 채택했고 1990년대 일본이 실시한 여러 부양책에 따라 경제에 계속 돈을 퍼부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때로는 경제가 회복되기도 했

고, 때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기회복은 부양책과는 관련이 없었다. 부양책이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경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성장 및 경제회복과 경기부양책 사이의 관련은 입증된 바가 없다. 그렇다고 이번에도 효능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바마를 지지하는 한 경제학자가 내놓은 주장에 의하면 과거의 경기부양책은 규모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대규모 부양책을 쓴다면 부양책의 규모 때문에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나는 이 주장에 대해 확신이 없다. 모두가 그럴 것이다. 사회자가 말했듯이 경기부양책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을 늘릴 것이다. 그러므로 부양책은 저축을 늘리고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 저축을 하면 그만큼 소비가 줄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은 줄어들고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들은 타격을 받는다. 부양책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부양책은 중립적이다. 여기저기 일자리를 만들지 모르나 이러한 일자리는 어쨌든 생기게 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경기부양책은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부가 행동을 하고, 책임을 지고,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고전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종류의 위기에 대한 최선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텔레비전 쇼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위기를 벗어나는 최상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행동을 해야 한다. 경기부양책은 중립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990년대의 일본처럼 너무 장기간 부양책을 쓰면 공공지출이 민간 투자를 대체하게 된다. 부양책은 2년간이 좋으며, 2년이 한계라는 것이 일본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 이상 길어지면 일할 이유가 없고 투자할 이유가 없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생기게 된다. 정부

가 일자리와 이윤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러므로 부양책을 너무 장기간 실시하면 성장의 동력이 파괴될 수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유럽 국가와 미국에 전한 충고이다. G-20 회의에서 일본은 주로 이러한 주장을 할 것이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10년”을 피하고 싶으면 부양책 시행기간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양책의 둘째 위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인플레이션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만이 보호를 받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그들의 돈을 쓸 수 있으며, 전세계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올해의 10% 적자처럼 거대한 적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게는 어렵도 없는 일이다. 미국은 어떻게 부채를 갚을까?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갚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멸시키는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미국은 그들에게 좋은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다른 나라는 이러한 방법을 모방할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사용한 둘째 도구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생산업체와 금융업체에 대한 직접 개입이다. 이것 역시 극히 회의적이다.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려는 것은 잠정적인 부양책이 있는 후 자동차 산업이 회복되고 시장에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개입은 여러 해 계속될 위험이 있고, 이런 종류의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훌륭한 경영과 채신을 몰아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경기부양책과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사이에는 평행선을 그을 수 있다. 그것은 동일한 논쟁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장에 불을 지피고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차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경제적 역동성과 투자와 채신을 구축해 버리는 사회주의 체제와 같은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 내게 된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채신과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 자동차 산업체들은 단지 시간만을 벌고 있을 뿐이다. 은행체제와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위기의 진정한 근원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위기의 진정한 근원은 파생상품의 규모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도록 방치한 데 있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는 좋은 것이며, 훌륭한 금융 혁신이다. 파생상품 덕분에 보다 위험한 나라에 보다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생상품이 없었다면 중국과 인도는 성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유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를 넘었다. 얼마나 넘었나?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회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다. 그것이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 나와 있는 부실자산의 총액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총액을 모르고, 아무도 그 자산의 가치를 모른다. 미국정부는 어떤 면에서 구제할 가치가 있는 은행과 구제할 가치가 없는 은행을 구분하는 시스템을 고안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 이 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은 극히 위험하다. 이 자산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만이 말할 수 있다. 물론 시장에 내보내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많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쩐다는 것인가? 낡은 산업, 부패한 은행,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없었던 금융기관은 사라져야 할지 모른다. 납세자의 돈으로 그들을 살려야 할 이유, 경제적 이유, 윤리적 이유는 없다. 지난 몇 개월 동안 AIG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에서는 아무런 뚜렷한 윤리적, 경제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를 이야기 한다. 어떤 위험인가? 나는 가이트너(Geithner)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하루가 멀다고 상충되는 말과 신호를 내놓은 것을 그만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결정을 내려 어

느 한쪽 방안을 택하지 않는 한 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금융시스템 내의 신뢰는 다시 확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많은 칼럼니스트가 이에 대해서 글을 써도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은 “지금까지 겨우 두 달 밖에 안 되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 말은 맞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결정이다. 나머지는 미루어 둘 수 있다. 부양책도 미룰 수 있다.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도 미룰 수 있다. 부실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은 미룰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업계에 유리하지 않은 다른 신호와 정책도 갖고 있다. 세금인상, 기업계의 윤리에 대한 공격, 보너스 제도에 대한 비판, 기업계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 등이다. 기업계는 물론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중들 간의 담론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 너무 일러서 아직은 알 수 없다. 반(反)자유시장, 반기업가, 반기업에 관한 담론들인데, 이것은 미국 역사상 전혀 새로운 현상이며, 그것이 민주당원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그것이 어떠한 사태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자유무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까지 자유무역에 대한 공약을 하지 않고 있다. 매우 애매하다. 은행시스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애매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행정부와 민주당은 매우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일화된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경제에 관하여 극좌에서 극단적 보수에 이르는 매우 상이한 견해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매우 반자유무역적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오하이오와 펜실바니아 등 산업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당선된 후 그는 태도를 조금 바꾸었다. 최근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협정(NAFTA)을 수정할 의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의 선거공약의 일부였다. 그는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에 대한 고전적 입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콜롬비아, 미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현안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NAFTA가 좋은지 나쁜지는 자신도 모르지만,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국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논쟁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강력한 로비와 목소리들이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수혜자인 소비자는 목소리가 없다. 소비자는 조직화 되어있지 않다. 미국은 1980년대 미국의 자동차 로비가 일본차를 반대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인에게 일본차의 인기는 매우 높아서 디트로이트의 로비는 소비자들에게 압도되었다. 콜롬비아의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우리는 콜롬비아의 꽃과 섬유를 원한다”라고 할 것인가? 그들은 콜롬비아에서 무엇이 들어오는지 모른다. 한국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걱정된다. 그들은 한국 상품의 혜택을 받지만 그것이 한국 상품인지 모르며, 또 한국 상품이 한국의 것이라고 분명히 판별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로비를 할 것을 권하고 싶다. 또 다른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서 로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민에게 유럽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혜택을 설명해야 한다. 또 미국에서도 로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모두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기다리면서 여론이 정부를 지지해 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지지를 얻기 위해 행동을 해야 한다. 프랑스나 유럽의 경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없을 것이지만, 누가 알겠는가? 일부 산업 로비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은 런던의

G-20 회의에서 발표되고 확인될 한-유럽 자유무역협정에 극히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협정은 한국과 서유럽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현재의 위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조치는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강력히 천명하는 것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4월 2일에 열릴 이 한-유럽 자유무역협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미국에게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부와 경제계가 미국과 한국의 여론조성을 위해 활발한 로비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바마 경제정책의 다른 국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지 아닌지 잘 모른다. 내 말은 그것이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담론과 말 잔치에 그칠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녹색 일자리”와 “대체 에너지”다. 솔직히 말하면, 녹색일자리가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대체 에너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납세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대체 에너지가 무엇인지는 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체 에너지와 녹색 일 자리를 지지하는 정책을 얼마나 밀고 나갈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나는 이것이 순전히 말 잔치이며, 매우 빨리 사라져 버릴 한 줄기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나는 앞에서 말한 위기의 패러독스에 관한 언급을 다시 거론하고자 한다. 나는 미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했고, 미국 이야기로 끝을 낼 것이다. 미국 경제는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미국을 대체할 지도자나 지도자 집단은 없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국의 달러화는 통화로서 매우 애매모호하지만 유로를 포함하여 어떤 통화도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는 안전한 통화가 될 처지에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이 위기의 소산이다. 우리

는 위기의 초기에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배워 나가고 있다. 우리는 모든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한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미국의 연방은행이 상업어음을 사들였는데 그것은 교과서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는 그것이 교과서에 실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번 위기의 위험성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들은 “이것은 자본주의의 종말이다.”, “이것은 자유시장의 종말이다.”, “사회주의를 다시 손질하자.”는 등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에 빠져들고 있다. 사람들은 매우 빠르게 기본적인 지식을 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지식과 기본 원칙들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몇몇 기본 지식을 존중하고 몇몇 기본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위기에 있다고 여러분이 이 지식과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조와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결코 쓸모 없고 어리석은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나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을 잊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질의·응답

질문 오바마 대통령은 변화를 추구한다. 그는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압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프랑스의 소프트 파워는 나치의 그것을 능가했지만 나치는 프랑스를 침공했다. 이것은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오바마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입장이 그의 임기 중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질문은 경제문제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GDP의 2%에 해당하는 거액을 구제금융에 투입하였다. 한 일본의 금융인은 일본이 과거 10년 동안 GDP의 20%를 일본경제 살리기에 투입하였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미국의 구제계획은 너무 규모가 작은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나는 아시아의 금융 및 경제 통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특강을 위해 2007년 멤피스 대학에 갔었고, 2008년에는 롱아일랜드 대학에 갔었다. 청중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많은 미국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심을 갖고 미국의 일자리시장에 대하여 우려를 하는 것 같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컬럼비아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가? 한국 국회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소프트 파워 문제를 제기해 주어서 고맙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은 기본적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바마 행정부는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같은 정책이 아니라는 발상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서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안이었다. 소프트 파워는 정부가 구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말장난 같은 것이다.

경기부양에 관하여 경제전문가들은 1930년대의 상황을 놓고 공개

논쟁을 하고 있다.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1930년대의 경기부양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실효가 없었으며, 규모가 훨씬 더 커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마나 커야 할까? 우리는 모른다. 너무 크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따른다. 이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이야기 하겠다. 위기의 초기에 매우 완화된 통화정책이 있었다.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돌아가면 위기를 해소하지도 못할 뿐 더러 위기의 원인을 되풀이 하게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에서 비준이 되겠느냐?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의 역사를 생각할 때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높은 목소리는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상식이 승리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에서 비준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이래 모든 자유무역협정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는 있어도 모두 비준되었다.

질문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다. 하나는 경제에 관한 비관적인 전망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해주기 바란다. 둘째는 미국 달러화의 환율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번 경기침체는 미국의 부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읽었다. 미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총부채는 2008년 6월 기준으로 51조 달러이며, 과거 100년간 미국의 신용부채는 GDP의 150%였으나 대공황 기간 중에는 250%였다. 장기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인들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것뿐이라고 이 글의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미국의 부채가 이처럼 많은데도 미국 달러화는 더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달러화가 주요 무역결제통화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큰 혜택을 받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금융위기가 일단 지나가고, 사람들이 신용 리스크에 대한 공포를 일단 극복하면, 그리고 부양책 패키지가 집행되면 전세계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맞게 될 것이다. 이 압력은 다른 나라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강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자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환율을 자극할 것이다.

답변 둘째 질문에 먼저 답하겠다. 나도 질문자의 가정에 공감한다. 또 다른 패러독스는 경기침체가 극복되면 미국 달러화가 평가절하된다는 것이다. 안전한 통화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정일 뿐이다.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정확히 예측할 어떤 수학적 모델도 없다.

첫째 질문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은 미국인들이 좀 더 저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채의 적정수준이 문제다. 지금처럼 미국인들이 저축을 시작하면 그들은 구매를 안 한다. 미국인들이 저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하면 안 된다. 무엇이 부채의 적정수준일까? 부채가 전혀 없다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제의 엔진이 아니다. 부채가 너무 많으면 미국은 세계를 경기침체에 몰아 넣을 것이다. 미국이 충분한 부채를 지고 있지 않으면 역시 세계는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다. 적정수준의 부채는 산정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정책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지금의 위기에 대한 역사를 써야 한다면 나로서 보태고 싶은 말이 있다. 모든 것은 9/11 이후에 매우 낮아진 금리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경기침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생긴다. 나는 알렌 그린스팬(Alan Greenspan)을 매우 존경하지만 이번 경기침체의 주 원인은 그가 9/11 이후 과잉 조치를 한데서 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9/11 이후 세계경제가 정지되지 않을까, 무역과 투자가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9/11 직후 그린스팬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린 결정은 경제성장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 이자율을 내리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다. 아주 효과가 좋아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자율을 올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 당시 모두가 도취해 있었고, 미국이 높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

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 전세계가 성장을 하였다. 누구나 매우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든 이 느슨한 통화정책에 더하여 고유가 때문에 큰 돈을 모은 러시아와 아랍국가,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외자가 미국으로 유입되었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운 돈의 홍수를 맞게 되었다. 투기는 이러한 느슨한 통화정책의 결과였다. 오늘날 정치적 논쟁의 핵심은 사람들이 너무 탐욕스러웠고, 너무 투기를 했으며 그 결과 거품이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투기가 가능했고 왜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졌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돈이 넘쳐나고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탐욕은 어느 사회에나 있지만 탐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미국에서처럼 돈이 넘쳐났을 때이다. 위기의 원천은 탐욕이 아니라 느슨한 통화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경제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목표로 다시 느슨한 통화정책을 쓴다면 그것은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질문 프랑스 혁명의 경우, 왕실이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그리하여 3부 회의가 소집되고 혁명이 일어났다. 매우 나쁜 유추이긴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국가들이 미국에 반기를 들고 봉기하지 않겠는가? 나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영원히 존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소한 달라져야 한다. 미국의 헤게모니의 향후 향방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이 헤게모니는 누가 정한 것이 아니다. 역사의 결과이고 귀결일 뿐이다. 미국 내부에는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늘 많이 있었다. 현재에도 여전히 학계나 정치계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왜 미국이 세계를 책임져야 할까? 어찌다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거의 우발적으로 제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제국은 제국을 건

설하고자 했었다. 중국제국도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었다. 미국은 제국이 되었다. 그것은 정말로 선택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미국 내부에 논쟁이 일어나고 미국인들이 더는 제국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첫째, 반미 봉기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일은 가끔 정기적으로 있었다. 오바마 재임 중의 경우를 말한다면, 오바마의 카리스마는 최소한 4년간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본다. 개인으로서 오바마는 매우 카리스마적이고, 전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통합된 시스템 아래 있고, 모두가 세계 정부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 무엇이 이러한 세계 정부가 될 것 인가. 한 나라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분명히 그 대답은 “노”이다. 어떤 나라도 세계를 위한 국제경찰이 되고자 하는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은 경제적 또는 군사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 유럽인들도 그럴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이 일에 흥미가 없으며 잘 사는 것이 으뜸된 관심사다. 그러므로 미국을 대체할 의사가 있는 나라는 없고 국제경찰은 필요하다. 만일 7함대가 사라진다면 누가 그것을 대체할까? 아무도 그것을 자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半)국제적 정부의 출현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G-8은 사라질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열릴 G-8은 이러한 종류의 모임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이며, 앞으로 G-20이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것은 이런 종류의 세계정부의 확장이며, 미국은 여전히 주도적 목소리를 가질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입지가 강해져서 그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질문 5~6개월 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귀하는 세계경제연구원
에서 특강을 한바 있다. 그 당시 당신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펀더멘털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오늘 강연 서두에서 당신은 몇 가지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그 실수란

당신이 미국 금융위기의 전개에 관해 내놓은 앞서의 예측에 대한 것인가? 또한, 당신은 아직도 미국 금융시스템의 펀다멘털을 믿는가? 둘째, 요즘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1930년의 금융위기와 지금의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며칠 전 미국의 한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오늘날 사람들은 1930년대에 비해 더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경기침체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귀하께서 지난번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유감이다. 지난번 조찬강연이 끝난 후 나는 내가 너무 흥분했고,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했다.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것은 나의 실수였다. 전세계의 은행과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안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는 충분한 정보가 없었다. 부실자산은 미국내의 주요 금융기관에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조금씩 조금씩 알려진 일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도 그 전모를 모른다. 우리는 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따라서 위기의 총체적 규모를 모른다. 우리는 지금 파생상품에 근거를 둔 파생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끝도 없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보부족 때문에 저지른 나의 실수였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규제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는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었다. 은행이 판매한 부실자산을 약품에 비교해 보자. 사람은 몸이 아플 때 약을 산다. 약을 먹으면 병이 나올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런 정보가 종이에 인쇄되어 있거나 아니면 의사가 약의 효용과 위험을 설명해 준다. 금융부문에서도 규제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보와 정보의 투명성이 해결책이다. 정부는 규제를 추가하는 일이 없이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적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규제가 너무 엄격하면 금융부문의 혁신을 말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사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매하는 것인지 알도록 해 주는 정보의 투명성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펀다멘털은 모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쇠신능력, 시장에 쇠신을 도입하는 능력, 전세계로부터 가장 좋은 연구를 끌어 모으는 능력, 우수한 산학협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제의 엔진으로서 미국에 필적할 만한 것이 아직은 없다. 중기적으로 미국 산업은 화려한 중흥기를 맞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해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며, 누구나 깊은 인상을 받는다. 도처에서 진행되는 바이오 기술이나 나노 기술과 관련된 모든 것은 우선 미국의 시장에서 선을 보일 것이다.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모든 새로운 제품과 기술이 그곳에 있다. 혁신의 물결이 금융위기로 잠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지나면 새로운 제품과 방법과 기술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한 자금조달과 경제적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의 성장은 주로 혁신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혁신에 필적할 성장의 엔진은 없다. 이것이 내가 미국 경제의 펀다멘털이 여전히 OK라고 말하는 이유다. 1930년대와 오늘의 큰 차이를 한 마디로 말하면, 1930년대에는 인구의 2/3가 농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위기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위기는 심각했으나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인구의 50%가 농촌에 살고 있어서 위기의 영향이 덜 심각했던 것이다. 산업화가 더욱 진전된 독일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농업조차도 영향을 받는다. 농산물을 세계시장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모두가 위기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런 피난처가 없고 숨을 곳도 없다. 이것이 1930년대와 크게 다른 점이다. 또 다른 점은 모든 나라들이 복지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복지제도와 국가의 개입으로 아프리카와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위기의 영향이 1930년대처럼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끝으로, 1930년대와 지금의 아주 큰 차이는 우리가 그 당시 보다 경제에 대하여 더 잘 안다는 점이다. 1930년대에는 많은 큰 실수들이 저질러졌다. 국경을 봉쇄하고, 미국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금지했으며, 전매제도를 강요했었다. 이번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다. 1930년대에는 그런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처럼 보였다. 그 이후 경제적 지식이 크게 발전했다. 우리는 그런 정책이 실수였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이번 경기침체를 악화시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고, 경기침체를 악화시키는 요소였던 뉴딜정책과 같은 1930년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해 주었다.

질문 3~4주 전 루빈(Rubin)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정부 주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왔었다. 실상 그는 금융위기의 원흉이며, 파생상품을 재포장해 파는 것을 고안해 낸 사람이다. 그는 이런 금융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는 파생상품을 계속 재포장하여 파는 일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 함의를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나의 첫 질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것이다. 한국 국회는 여야 모두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 보고 있다.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거의 비준할 태세가 되어있으나 야당은 한국이 그것을 먼저 비준해야 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내 입장은 미국측의 입장이 모호하긴 하지만 우리가 나서서 먼저 협정을 비준하여 미국 쪽 코트로 공을 넘겨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은 국제사회에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나는 한국이 먼저 이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질문으로서, 미국 소비자는 한국의 브랜드 네임을 잘 알지 못하므로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열심히 로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미국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한국 제품을 광고할 수 있겠는가? 물론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은 수퍼볼 경기의 비싼 시간대를 사서 자사 제품을 광고한다.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미국 소비자에게 한국 제품 이미지를 개선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끝으로,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위기 이후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고, 새로운 건전한 연구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점에서 한국은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나는 믿고 있다. 우리는 줄기세포 연구의 선두주자이지만 불행하게도 황우석 박사 스캔들을 겪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 예산의 지출을 중단했다. 그런데 몇 주 전 오바마 대통령은 줄기세포 연구에 청신호를 주었다. 이 조치가 영국, 프랑스, 독일을 이 경쟁에 뛰어들게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우리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변 경제전문가의 책임에 관한 루빈 장관의 말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면, 나는 모든 경제전문가는 의사들이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해당하는 선서를 해야 하며, 그 첫째 줄은 “나는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 우리는 매우 정교한 제품을 만들어 내며, 이것이 매우 정교하다는 이유로 아주 기뻐한다. 우리는 그것이 중대한 사태를 야기한다는 것을 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매우 유용한 모델도 만든다. 우리는 자유무역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나쁘다는 모델도 가지고 있다. 때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다지 조심을 하지 않는다. 경제전문가는 과학자와 같다. 그들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 하는 부류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설명하는데 능하지 않다. 오늘날 이런 전문직은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의 종류에 대하여 진정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집단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상품을 창시했는데 이 상품은 유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 루빈 장관은 나보다 더 창의적이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유해하다고 본다. 직업에는 윤리적 문제가 따르며, 이제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으로 수 년 내에 이런 윤리적 차원의 고려가 직업에 포함될 것이다.

자유무역 문제에 관하여 말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지식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유무역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그것이 일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안다. 자유무역은 세계 전체를 위해서 좋다. 개인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협정에 의해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사국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러한 세계적 혜택이 일부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큰 실수는 부차적인 이유로 자유무역 협정을 잇는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세계적으로 좋은 것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잇는 것이다. 이것은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의 반대자는 늘 그 찬성자 보다 PR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찬성자는 자유무역이 세계적으로 볼 때 좋다고 말한다. 자유무역의 반대자는 수입 때문에 암소나 점포를 잃게 될 작은 마을의 한 사람을 골라잡는다. 세계적인 혜택과 부정적인 영향 사이에는 비대칭적 불균형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촛불시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시위지만 시위자들은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했다. 정부가 당시 좀 더 조심을 했더라면 혜택에 대하여 보다 잘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의 반대자들이 다시 촛불시위를 하도록 만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미국 소비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며칠 전 한국 대통령은 브랜드 한국을 해외에 선양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뛰어난 아이디어의 발상자가 바로 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전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왜냐? 대통령은 10~12명의 “현명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현명한 사람”들이 한국을 해외에 선양하는 문제를 정한다. 그들은 태권도가 먼저이고, 김치가 둘째라는 식으로 선양순서를 정한다. 해외에 알려야 할 10가지 좋은 것의 목록

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좋은 방법은 PR 회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가는 것이고 미국인이나 프랑스인에게 “한국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싶은가?”, “한국에 관한 당신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한국에 관한 당신의 선입견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무엇을 수입하기를 기대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여러분은 수요자 측면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나는 한국을 브랜드로 선양하는 문제를 다룰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다소 놀랐다. 그것은 현대와 삼성이 미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팔 최상의 제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방법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먼저 미국의 소비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문기를 바라며, 각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PR 캠페인을 벌이기를 기대한다.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비준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런 쟁점을 두고 주저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나의 추세이다. 현재의 부차적 상황 때문에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줄기세포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겠다. 내가 앞서 말한 바처럼 경제성장은 혁신에서 나온다. 오늘날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은 이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이라는데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물론 사고가 있었지만 모든 나라에서 사고는 늘 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 일을 시작 해야 한다. 연구시설도 있고 연구인력도 있다. 이 사고가 난 후 많은 연구인력이 미국으로 갔다. 한국은 이들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in a Time of Global Crisis *

Jeffrey J. Schott

Thank you very much for organizing this event and for inviting me back. It's always a great pleasure to visit Korea and see my good friends. It is a special honor to be invited by IGE's new President, Dr. Nam.

When I spoke to this group last February, I shared my views on trade policy and what was likely to happen in the Obama administration. Unfortunately, my predictions about rising protectionist pressures, continued drift in trade negotiations, and in congressional consideration of the KORUS FTA have all been validated. These challenges continue to confront both our countries, even as they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bilateral cooperation. That is the broader context that I would like to talk about today: the overall US-Korea partnership and how our countries can work together to help resolve global economic problems.

We are now suffering through the worst economic recession since the Great Depression. While the latest monthly data provide some welcome news, it is still too early to predict a robust recovery from

* Transcription of a speech given at the IGE/Samsung Electronics Global Business Forum on Tuesday, July 21, 2009.

the sharp declines of the past few quarters. Indeed, earlier this month, the IMF predicted that world output would decline by 1.4 percent in 2009 before weakly rebounding in 2010. US GDP is expected to fall by 2.6 percent, which is a terrible result except when compared to the much larger declines in Japan and in the Euro-area. The global recession would be even worse except for the significant gains in China and India, and even those countries are down sharply from peak growth levels earlier this decade.

The relatively good news is that the IMF predicts a solid upturn for the global economy in 2010 but with anemic growth in the G-8 countries except China. Unemployment is likely to continue to rise. The US unemployment rate recorded a 26-year high of 9.5 percent in June and probably will exceed 10 percent by early next year. What this means is that we are likely to see continued pressure to subsidize and protect domestic industries in many of the world's largest market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Korea has also taken a big hit, and I would be cautious about reading too much into the recent positive monthly trade numbers. While the Korean economy seems to be turning the corner, the pace of that recovery will depend importantly on the pace of global recovery. The IMF annual review of the Korean economy is more pessimistic about the near term outlook than that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t expects Korea's GDP to decline by 3 percent this year and only weakly rebound in 2010, just like the United States. And, just like the United States, Korea's unemployment rate will continue to rise into 2010.

The precipitous drop in global demand coupled with seizing up of trade finance last fall has taken its toll on international trade. Trade has plunged 24 percent over the past two quarters, about four times as fast as the decline in global output.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experience of the past 50 years during which time trade increased about three times as fast as output. The latest IMF data predict that the volume of world trade in goods and services will decline by more than 12 percent this year and will not grow much in 2010. So that is the situation, the crisis that we face and one that does not merit a great deal of exuberance in terms of future prospects.

Dealing with the global crisis is a top priority for both of our countries. The Obama administration secured a massive 800 billion dollar stimulus bill to counter an economy that Larry Summers admitted at a lecture at my institute just last Friday as being “in free fall” when they entered office last January. In addition, the Treasury and the Fed have had to commi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help shore up the capital base of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underwrite the restructuring of General Motors and Chrysler during their rapid bankruptcy process. So, we have had a massive crisis and we are not out of the woods yet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re is hope that the economy has bottomed out and will hopefully begin to recover soon.

In Korea, as you know better than I,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intervened extensively to bolster Korean industries and to limit job losses. Each of us will continue to deal with our own economic challenges but neither of us will fully succeed unless there is marked

and sustained improvement in the global economy. That is a key point. We both are going to be doing a lot at home to deal with our economic stress but we will need to work together to ensure a sustained global economic recovery if we want to have confidence that the action we take at home will bring us long-term prosperity.

The US has long been in a leadership position in the global economy but that is no longer sufficient. We have seen an evolution of the governance of the global economy move from the G-2 (the US and Europe) during the years when I was in government to the Quad countries (also involving Japan and Canada). Then, it expanded to G-7 countries, again comprising the US and Europe and recently including China and Russia in the G-8. None of these combinations are really sufficient because they omit many countries that emerged from the depths of poverty in the immediate post-war era and have now become legitimate economic superstars.

Korea is in that group of countries that now merit a place at the table, and that have been willing to assume the responsibilities of leadership and work to promote better global economic governance. That is the key factor that has changed only recently in the midst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that regard, it is noteworthy that Korea was named to be part of the leadership Troika in the G-20. Korea is taking a very active role in pushing multilateral initiatives to help support coordinated economic recovery and sustained growth in the coming years. As a result, the Korea-US partnership has now taken on a new dimension.

Not only are we working together to deal with bilateral issues but, even more importantly in this time of economic stress, we are working together as responsible leaders of the global economy. That is what I mean by the deepening of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And the big change is Korea's new participation, its pivotal role in the leadership Troika of the G-20 with the UK and Brazil. In that regard, it's likely that South Korea will host the first G-20 meeting in 2010, an event that has not yet been confirmed but will likely be announced at the next G-20 meeting in Pittsburgh in late September.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this partnership, I think a lot of credit has to go to Dr. SaKong Il, the founder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a very close friend of my institute and, of course, one of the leading economic advisors in the Korean government. He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coordinating G-20 actions on macro-economic policy and trade. He has a close working relationship with Larry Summers in the White House and with other top economic officials in the other G-20 countries. He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coordinating the macro-economic response to the crisis as well as in the area in which I deal much more closely,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The G-20 has been trying to prevent an implosion in world trade that could result as politicians respond to the economic downturn by implementing new protectionist measures. Often the first response of politicians is to protect and subsidize domestic industries and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suppliers. Indeed, in many instances, national stimulus programs include government purchasing regulations that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suppliers as well as subsidies for domestic firms that face onerous restructuring as a consequence of the economic downturn. In this context, governments need to both resist protectionism and pursue new trade liberalization.

To that end, I believe that the G-20 – in addition to its pronouncements on protectionism, which I will talk about in a moment – will make a big effort to revive the Doha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re are already extensive efforts underway in that regard. The reason this has been an issue in both the G-20 meetings and the recent G-8 summit in Italy is simple: trade has to be part of our solution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Otherwise, it will be part of the problem limiting economic recovery. Sending a clear signal that countries will continue to open their markets and increase competition, I think, is critical to giving the major economies a tool to resist the protectionist calls in their own countries. I would be happy to talk more about this in the questions and answers segment, but if I go into too many details on the Doha Round, we will not have enough time to discuss other key challenges that our two countries face and where we are working together.

I gave a prescription to solving the Doha Round in Singapore a few days ago and it seems to be a strategy that is gaining resonance both in America and between G-20 countries. It requires a renewed effort to negotiate on agriculture, manufactures and services with the aim of trying to conclude a negotiation by the end of 2010 as the G-8 leaders committed, but probably more likely early 2011. It is a feasible target, but it requires action at the G-20 summit in Pittsburgh

in September to push the ministers to get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to start the very intensive work needed to craft the final Doha package.

To that end, President Obama plans to give a major speech on trade policy, possibly before the G-20 summit, in which he will frame moving forward on trade as part of the broader respons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Hopefully, he will remove a lot of concerns and anxieties that were created by his rash comments on trade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when he was in hand-to-hand combat with Hillary Clinton, now his Secretary of State. The harsh rhetoric made during the political campaign has changed since President Obama has assumed office. While trade is not his top priority, he has been firmly committed to an ope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o concluding the KORUS FTA – I’ll talk about that in a few moments.

Rising Protectionism

Let me turn now to what the G-20 is doing about the immediate concern of rising protectionism. Given the fragility of global economic conditions, we need to ensure that we don’t make a bad situation worse by restricting opportunities for trade and investment. There is a lot of pressure to do so, and policymakers will continue to face protectionist pressure for two related reasons. First, unemployment will continue to rise, even after the economy stabilizes and begins to recover since firms are cautious about adding to payrolls until their order books are on firmer footing. Even with modest economic growth reemerging in 2010 it will take some time to get back to the *levels*

of economic output achieved before the current recession. It will take some time before the man on the street and local business feel that they are as well off as they were a few years ago. That's important to keep in mind.

Second, to remedy these problems, politicians understandably want public funds deployed to increase local jobs and to benefit local companies, and thus insist that national stimulus programs favor projects with high domestic content. The US program is illustrative of this problem; unfortunately, it is being emulated by China and other countries.

To be sure, the G-20 summit declarations in Washington last November and London in April pledged to avoid new protectionism. I might say that Korean leaders (President Lee, Dr. SaKong, and others) were at the forefront in pushing for a very strong standstill commitment and they got it. The London summit leaders agreed not to raise "new barriers to investment or trade in goods and services, impose new export restrictions, or implement WTO – inconsistent measures to stimulate exports" through the end of 2010. In addition they agreed to language proposed by the Korean leaders to notify the WTO and rectify promptly measures inconsistent with that pledge. Unfortunately, however, to date no G-20 country has yet done so.

Overall, the G-20 participants have done better than expected but not as good as they should have done given the depth and breadth of the global crisis. Some G-20 members violated the pledge before the ink was dry on the Washington Summit Declaration, and several

of those measures remain in force today. The trade standstill was misunderstood and misapplied. Some countries took it to simply mean honor WTO obligations, but under WTO rules countries can legally impose a wide-range of protectionist measures whether via anti-dumping, safeguard actions or other ways. Moreover, in areas where WTO disciplines are incomplete or absent such as government procurement, governments can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suppliers without worrying about WTO censure. In fact, many of the standstill violations fall in this latter category. That's why WTO negotiations are needed to strengthen multilateral disciplines over such actions and that's why it is important to have a concrete and substantive result in the Doha Round.

The basic point here is straightforward. Amid global crisis, the objectives should be to avoid measures that distort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whether WTO – legal or not, because such actions inhibit global recovery today and clog the arteries of perspective growth going forward.

What can be done about this? Well, the G-20 started by issuing the initial standstill declaration at the Washington summit in November 2008. Last December, other trade experts and I called for the WTO and the World Bank to closely monitor these developments, and “name and shame” countries that violated their summit commitments. To his credit, Pascal Lamy, the head of the WTO, took up this task, at least the naming part. The WTO now issues quarterly reports on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and trade related developments. The latest report was just issued last week and noted an uptick in

restrictive measures but voiced relief that actions were not as widespread as feared. In essence, by putting a spotlight on prospective abuses, public monitoring of the G-20 policies has helped constrain a surge of new protectionist measures. As we go forward to the next summit in Pittsburgh and then on to the prospective summit in Seoul – probably in April of next year –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hould continue their efforts to broaden the scope of this standstill commitment and ensure that it is faithfully implemented.

Now a lot more can be said on what we can do together on trade, both resisting protectionism and furthering liberalization. Some progress in this regard will occur as our two governments begin the preparation for Pittsburgh. Hopefully, that will then lay the foundation for continued efforts as the role of the G-20 evolves in 2010 under Korean leadership. It could be a critical period for global economic governance because it could mark a clear decline in the influence of the G-8 – which has not done much in all honesty in recent years – and show increased credibility and influence of the G-20 in which Korea now plays a very crucial role. If the institutional change begins to evolve, it w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not only for our bilateral partnership but for Korea's role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about half of the G-20 members come from the APEC region. It will perhaps shift some of the balance of authority and power in global economic governance from the transatlantic region to the Asia-Pacific.

There is another area where we have common interest and common need to work together,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presents

a global challenge of critical importance. Reducing emissions of green house gases requires substantial and sustained efforts by all of the major emitters: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like. No global regime can succeed unless all the major emitters substantially reduce their carbon footprints. That said, developed countries need to take the lead by committing to drastic cut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with significant progress toward that goal by 2020, and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major developing countries that undertake substantial and reciprocal commitments to cut their own emissions. Both Korea and the US have put great emphasis on this issue and,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they have sought to promote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 that create incentives for low-carbon and green growth.

President Obama ranks global warming among his top priorities. Both the 800 billion dollar stimulus package and his ten-year budget blueprint emphasize green growth with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smart grid and electricity transmission.

In addition, the administration is investing a lot of political capital in the passage of new climate change legislatio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cently passed by a narrow margin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known in Washington as the Waxman-Markey Bill) and the issue is now being debated in the Senate. The legislation would institute a cap and trade system that would require sharp reduction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over time but with ample subsidies for domestic industries during the initial adjustment period through either free allocation of emission per-

mits or by direct subsidy. Despite the House vote, however, a lot of work remains before a bill can reach the desk of President Obama. At best, the Senate might vote on its own bill in October, which will likely differ in important respects from the House bill and thus require negotiation in a House-Senate conference. That conference is unlikely this year. So, the US delegation will probably go to the Copenhagen Summit in December 2009 without a firm legislative mandate but perhaps with a good idea of what that mandate is likely to be if the Copenhagen process is productive.

Similar progress is being made in Korea. Since President Lee took office, Korea has actively promoted a new paradigm of low-carbon and green growth, adopting a new “green new deal” policy aimed at creating jobs and shifting to a lower carbon future. Internationally, Korea has shown its leadership by committing to a binding targe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Copenhagen Accord. There is a clear interest in working to secure a new global accord. Korea’s interest can be defined very simply: it resides downwind from the world’s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It is in Korea’s vital interests to ensure that there is a global regime, one that accommodates the full participation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Now, that will be the challenge – how to get countries, rich and poor alike, to contribute to policy reforms and regulatory reforms that actually affect economic activity in their own countries – because when talking about climate change, you’re talking about adding a price to a good, carbon, that was previously free. The level of the carbon price will affect what is produced, how it is produced and

where it is produced. So, it has consequences for resource reallocation and redistribution both within countries and between countries. That makes the task of crafting a global climate regime very difficult, particularly when industrial countries have a long history of emitting greenhouse gas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rapidly increasing their level of emissions have only done so in substantial quantities for a few decades. So there are equity questions, ones that will require transfer of resources from the rich to the poor to support and expand the ability of developing countries to introduce new technologies and pollution control equipment that will help them meet the global need to reduce greenhouse gases. To get that meaningful outcome will require a broader partnership by the US and Korea in ways that support both our global ambitions and our national economic policies to pursue low-carbon green growth.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will become ever more important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will require more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forums as we begin to craft the Copenhagen Accord and elaborate the details of that accord in the years ahead.

Comments on the KORUS FTA

Now, Mr. Chairman, I could not leave this podium without talking about an issue that you highlighted in your introduction. I suspect that the KORUS FTA is the issue in which most of you are eager to hear my views. I have saved it for last for a simple reason. The goodwill generated by working together on the big global economic issues I have just discussed should, I believe, carry over to the bilateral agenda and help strengthen the commitment of both countries

to overcome the remaining obstacles to implementing the KORUS FTA. Now, I remain optimistic that the KORUS FTA will be approved by Congress within probably the next six to nine months. That's a forecast that I probably can't stake my life on, but I think that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my optimism.

First, there is a substantive reason. The harsh criticism of the auto provisions of the pact and other aspects of the pact that have been criticized in the US and Korea have been ill-considered to begin with and are now even less convincing given the drastic changes in auto output and employment in both countries. The KORUS FTA was signed more than two years ago and since then there has been a sharp contraction in output and employment in the auto sector. This year US auto sales are running at an annualized rate of a little over 9.5 million units sharply down from the 17 million unit sales of a few years ago. "Big three" sales (Ford, GM and Chrysler) have been cut by about 40 percent compared to 2008. It's interesting that Hyundai and Kia, by contrast, have recorded small increases this year in their sales in the US market. What this implies is that good marketing helps companies and that bankruptcy hurts companies in pushing sales in the US market.

Now, in Korea, while sales are down only a bit this year in the domestic market, domestic production has fallen sharply due to weak demand in Korea's export markets. Some of the objectives that were sought in the KORUS FTA relating to automobile and SUV trade and investment no longer apply given changes in the marketplace. For example, Korea sought the elimination of the US light truck tariff; this

25 percent tariff would be phased out over ten years in the KORUS FTA. The objective was to encourage investment in Korean production facilities of SUVs so that they could be exported to the US and other major markets. Well, the demand for SUVs has imploded. Not many people are buying these kinds of vehicles anymore and it is highly unlikely, even with the elimination of the tariff, that anyone would want to invest in new production facilities in Korea or anywhere else. That's just one example of how things have changed. But, there are other aspects including the bankruptcy of GM and Chrysler and the massive amount of subsidies that the US government has put into those firms that have also affected the competitive situation. I think that those actions have nullified a lot of the criticism about the KORUS FTA commitments, which I didn't think had much substantive merit to begin with.

The second reason for optimism comes from the hard work of negotiators in Korea and the EU because the imminent sign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EU-Korea FTA raises a real competitive challenge for US automakers in the Korean market. My colleague, Fred Bergsten, likes to talk about competitive liberalization. This is a clear example of competitive liberalization where the initial US negotiations with Korea spurred Europe to emulate our initiative so as to not disadvantage European firms in the Korean market and to gain some of the benefits that accrue from more open competition. The Congress, in its delay, is making it hard for the US to reap the benefits of the trade negotiation while it looks like, coming from behind, the European firms and workers will get an advantage over US firms and workers in sales to the Korean market. I think this is the type

of issue that is very clear and straightforward to a Congressman. It's a question about having a level playing field and noting that the inaction by members of Congress is creating a disadvantage for their own constituents, and I think that this will be a strong argument for reviewing and reassessing the pace of consideration of the KORUS FTA in the Congress.

Third, and most important, is the 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These recent developments underscore the overriding importance of a strong US-Korea alliance for our mutual security interests. This lesson has been made very clear in the numerous meetings that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have had over the past six months. I think that this realization, which took shape during the early meetings that Secretary Clinton had when she was here in February of this year and have continued through the very frequent contacts between top officials of both our governments, underscores that it does not make any sense to have a small commercial matter about a few provisions in a major trade agreement create friction in an incredibly important bilateral alliance. That's the issue, I think, that will tilt congressional opinion in favor of supporting the KORUS FTA.

Clearly, when the issue comes on the US legislative agenda, it is a bit complicated given that the President has a lot of things to do in his first year in office including fundamental health care reform and climate change legislation. However, I think there is a great window of opportunity for the Congress to act if not at the end of this year, then early next year. It would be a wonderful opportunity for

President Obama to come to Seoul for the G-20 Summit next April, carrying in hand congressional passage of the KORUS FTA. It's my sincere hope that he will be able to do so because that would seal our partnership in a very positive way and ensure that we continue to work closely together for our mutual interests in the years ahead. Thank you very much.

Questions & Answers

Q Mr. Schott, you really covered all the points of interest so let me move on to more esoteric or conceptual questions. First, I think that it was a good idea that Dr. SaKong II and President Lee have promoted the idea of “standstill.” But, even though politicians agree, those pronouncements of agreement will never be met so standstill itself is quite inadequate. Given all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essure, I understand why they asked for a standstill, but perhaps we should be asking for a far greater commitment from the governments than a mere standstill.

Secondly, as you pointed out, trade is a very important issue, so I would like to move on to global trade liberalization. As you know Professor Jagdish Bhagwati has been an ardent supporter of global free trade while disdaining FTAs. One of the problems that he recognizes is that no progress now can be made effectively when 166 nations gather and thousands of pages pile up (most of which aren't read). Therefore, the only thing they can do is to disagree on everything which is proposed. That being the reality, how do you think we can move forward to solving these issues? The G-20 may be of some help with means of getting a consensus, but in the end I think that we need to have something that is a little more effective. Another thing we can do is perhaps to have some kind of basic standards in bilateral and trilateral agreements in hopes to come to a global agreement of some kind. What do you think about getting a mechanism of global governance to effectively reach an agreement?

A That should be the topic of my next lecture here because to answer it fully would take a good 45 minutes. Let me just give you a preview of what the lecture might include. First of all, you are right that the standstill is incomplete and that is why I said that the agreement was misunderstood and misapplied. A big part of the problem

is that when trade officials get together, they still think that they are supposed to work on border barriers (tariffs and the like). Tariffs are not very important in most areas today because of the extensiv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in both the GATT and WTO negotiations and in bilateral and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There are some exceptions, particularly in agriculture, but the real problems and major distortions to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come from discriminatory practices through domestic regulations. It is much harder to get international consensus to harmonize national regulations because those regulations are designed to allocate resources among different constituencies in each country and are designed pursuant to the particular conditions in those countries. To get everyone to say that we will have a common regulatory regime is very difficult. Take, for example, the US/Europe context where we have sought to harmonize regulatory policies. Even countries with high standards like the US and Europe have found it difficult to harmonize pharmaceutical regulations or other types of competition regulations because companies have invested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regulations. If you change that regulation, you may undercut the value of that investment.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has not been well understood. When I talk to transatlantic officials, I recommend that if you want to start harmonizing, you should start in the area of emerging technologies where the regulations haven't been set in concrete yet and already stimulated investments that will create vested interests against changing that regulation.

Second point on your comment on getting to global free trade, are there too many countries? Well, yes and no. The good news is that

there are many more countries that merit a seat at the table than at the time when Ambassador MacDonald and I negotiated more than 30 years ago. Many countries have an interest in getting some benefits from the trade negotiations. Most of those countries aren't being asked to do very much in the Doha Round. If you look at what's going on in Geneva, the real bottleneck is among ten or fifteen countries that are major players and have major interests that are not easy to converge. There will be no agreement (bilateral, regional, or multilateral) unless you can find some way to seek accommodation with these major players. Korea has now joined that group. That's why I was trying to emphasize, in rather general terms, the importance of building coalitions among the leadership countries and bridging differences between competing economies, particularly to ensur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hina. That is crucial. We are now in an era of coalitional politics in the world trading system and negotiating is a lot more complex than in previous multilateral rounds. Next point, global free trade is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WTO but the WTO is not fully competent to achieve it. As WTO officials have discovered, most of the problems that they deal with are not fully trade problems. Indeed, trade is just a small part of the problem. They don't have the competence nor do trade ministers have the competence to make the decisions to change national policies in all the areas needed to remove distortions to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That will require some change in the way the WTO does business in the future and with whom it does business. But it will also require important changes i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governance. I can tell you from my own experience in the US. In the US, there are big firewalls between the State Department,

Treasury, USTR, and others. They should be working together but often have their own bureaucratic priorities. That is, I'm sure, emulated in many other countries.

Q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mprehensive update on the state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prospects for Korea-US relationship. I have three questions and I'll state them very briefly. First about the G-20, we all know that the launching of the G-20 Summit process was a reaction to this global economic crisis. We are, as you said, not out of the woods yet, but it seems the global economy, at least, has touched the bottom so our outlook for the global economy is now changing. In accordance, the G-20 Summit agenda has to change as well. What do you think is likely to be the focus of the agenda of the Pittsburgh summit as well as the one that I hope will be held in Korea early next year? Also, do you think that the G-20 is likely to replace the G-8 Summit process for good? As we know, the G-20 Summit, as it is now, is institutionally insecure.

Secondly about climate change, you implied that President Obama is not likely to reach a deal on its carbon emissions with the US Congress by December this year and you impli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unlikely to reach a deal in Copenhagen about the post 2012 climate change regime. So you have implied that probably the schedule of negotiations will have to be extended into the future. In that regard, what do you think is the likely timeline for the conclusion of the climate change deal?

Thirdly about the KORUS FTA, I was very pleased to hear your now rather sanguine assessment of the prospects for the FTA ratification in the US Congress. We have been talking about a possible request from Washington's side for a side agreement to complement the FTA. Do you think that a side agreement is necessary or can we do without it? Related

to this, do you think that the existing restrictions on the import of US beef could pose a problem to Congress in that context?

A First with regard to the G-20, you're right that we are about to come to the phase that we have to ask these questions: what should the G-20 do and should it have a more secure institutional role? I think, going into Pittsburgh, more focus will still be on the immediate tasks of coordination, prospects for international financial reform, and reviving the Doha Round. As I said before, there is a great deal of activity already continuing today in Singapore among trade ministers discussing what needs to be done to accelerate the pace of Doha negotiations. The new Indian commerce minister will host a meeting of some trade ministers in Delhi in early September and that could help develop some ideas for overcoming the obstacles to agreement on the negotiating modalities, the technical term in Geneva for the rules for negotiation, on agriculture and manufactures. And I'm hoping that President Obama's speech will also set the table for a constructive result on trade in the Pittsburgh Summit.

Then subsequently,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institutional reasons and substantive reasons that the next G-20 Summit builds on past achievements -- in that regard, more can be done to elaborate the standstill and to advance Doha. That means the Seoul meeting next year probably will have to spend more time on assessing if the benchmarks for progress are being achieved, and ensuring that the activity bears some fruit or perhaps teeing up prospective issues for compromise.

What's the future of the G-20? We will need to have a number of conferences,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in the fall and winter of next year, discussing and brainstorming on how best to proceed on the institutional side of the G-20. Will it replace the G8? Well, it's hard to disband these types of institutions, but it's also hard to continue to put a lot of credence in them, given their poor track record over the recent years. That said, I think there will be more priority given to some elaboration or hybrid beyond the G8 because the G8 has not proven very effective.

On climate change, let me be clearer on what I think will happen in the US and internationally.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reach agreement this year between what the House wants to do and what the Senate wants to do on climate change legislation. The disagreements are not so much over the overall target as the way pain will be distributed among different constituencies and the ways that those groups will be subsidized through free allocations or tax expenditures. And that will cause, I think, a delay in passage of US legislation, probably into next year. Nonetheless, there will be already a clear signal that the Congress is committed to a cut of 20% in overall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20 from a base year of 2005. So that should be helpful in working out the general terms of the Copenhagen Accord this December. But I expect that the negotiators in Copenhagen will fall short of their goals and at best reach an interim pack without hard numbers and those hard numbers will have to be fleshed out over the next year or two. This means that we won't have a clear idea either regarding the contribution that developing countries might take because clearly, with the limited progress that

has been made so far this year, it is very unlikely that you would get any hard commitments from the major emitters in the developing world.

Finally, in the context of the FTA, you asked about side pacts. After a great deal of uncertainty and ambiguity about whether the Obama administration would call for the renegotiation of the pact, I think that it is becoming increasingly clear that it is in nobody's interest to do that. At least as I understand it, the current bilateral consultations between senior officials are focusing on ways to augment the agreement with bilateral cooperation accords in areas that would benefit both countries, particularly in sectors that had been subject of concern, including the automotive sector. So I could see accords that look into joint efforts to develop new engine technologies, pollution control technologies, some things that are already being done, in part, by the private sector. For example, some Korean firms with the most advanced technologies in electric batteries are already working with US counterparts, so I can see that being consolidated and providing a reason for politicians to say that this is going to be better for our constituents in light of everything else that has happened.

Regarding beef, we've resolved most of the problem. There's a little bit more to do, and Senator Max Baucus, the chairman of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is very concerned about it; at the same time, he's also very interested in completing the KORUS FTA. For the reasons I mentioned earlier, I think we will be moving closer to a decision point. I think the issues will be put into perspective, and I'm sure Senator Baucus, who wants to have this deal ratified, will

find a way to work with both US and Korean officials to ensure that the deal gets done.

Q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nlightening presentation, Mr. Schott. I want to ask a somewhat different question. One paper I read several months back says that aggregate debt of America reached 350% of American GDP. I mean aggregate sum of debt owed by public sectors, corporations, and consumers. It says that the ultimate solution and long-term solution of this global financial crisis and economic recession will, as American consumers pay back this debt, slow down global trade and also slow down economic recovery. Also, for your information, the Korean aggregate debt is 26% of GDP as of March this year. If we have to pay back debts and reduce debt numbers, as the exit strategy, what do you think should be the appropriate percentage of debt to GDP and how long should it take to reach that level?

A I'm probably not the best person in my institute to give you a specific answer to your last question on debt ratios, so I don't want to confuse the issue by saying something off the top of my head in which I haven't done a great deal of research. But the issue of increasing debt burdens in our societies is important. There will have to be an increase in savings, so that will have an impact on projected growth rates for the next decade or more. Now, what impact will this have on trade, if the US consumer buys less? That really depends. It will clearly affect the composition of trade. But if we have more investment, we will continue to trade more, but in different types of products. Maybe less cell phones, though we need better cell phones in the United States, our cell phones don't work very well. We get the old cell phones that children in Korea will no longer tolerate and

those older models then get sold to the United States. So there's a question of how it will affect the composition of trade.

Also, one related question is whether that investment will lead to higher growth rates, and then lead to higher volumes of trade. Clearly, there will be a change and we will not see the types of personal consumption and import demand in the United States that fueled the binge of the past decade, but we will see some re-orientation, restructuring of the growth. The bigger problem is if we don't see that restructuring and the debt continues to build, that's a formula for a big inflationary spurt over the medium to longer term, though probably not in the next few years. But there is a concern and I know Chairman Bernanke has mentioned frequently in his comments that if we don't deal with some of these problems, we will see growing inflationary pressures in the out years.

Q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xcellent presentation. I'd like to make a comment on the US-Korea FTA and one comment on Korea's solar energy development. Not only is the KORUS FTA going to affect the two countries involved but also it will act as a "pilot agreement" which could determine whether future ones get passed. Secondly, the Korean government had tried to subsidize solar energy companies but in the end it didn't happen. It seems very difficult to subsidize alternative energy.

A Thank you very much on both sets of issues. Clearly, when the KORUS FTA was negotiated, the US felt that it would encourage further agreements in the region and it has, the first one being the Korea-EU agreement. In the short-term, I am not sure that we will

see rapid progress on Korean negotiations with either China or Japan. With regard to Japan, they now have some political weakness in the government and I think that even after the election they will be in a difficult position to pursue a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and, indeed, many of the problems that have stalled those negotiations since December 2004 will probably remain difficult for them to address. With regard to China, I agree that there is interest in both countries in pursuing a free trade agreement. I think that there are substantive differences in what each thinks should be in that trade agreement and what priorities should be given. It will likely be an interim accord that does not have a great deal of commercial implications but that sets a framework for working in the future. That may be possible. But, I don't think a commercially significant deal is likely in the very near term. I don't think either of initiatives will complicate the revival of Doha.

On your comments on solar energy and subsidies, I think that you make a very important point that just giving money to companies for technologies is not sufficient. There has to be some accountability. There has to be some way of accessing the grid. US subsidies for bio-fuels have created distortions in the investment signals and led to some uneconomic investment and production decisions. We would hope that in the future we will have more private-public partnerships accompanied with more stringent market disciplines and I think that is the direction that the industry should take. There will be a need to do more on smart grid technologies; IBM is doing a lot of work on that. These are areas where both of our countries can benefit from working and innovating with each other.

Q Since you're coming from an APEC meeting, let me ask you an APEC related question. 16 years ago, in 1993 the US hosted an APEC meeting in Seattle (Block Island Leadership Meeting) and that was the first year of the Bill Clinton administration. He took a leadership role in this process and the following years saw good progress. After this year's meeting in Singapore, the meeting will go to Japan and then back to the US. Soon the US will have another opportunity, especially President Obama, and incidentally in 2010 is the year of the Bogor statement, which stated that the years 2010 and 2020 would respectively mark years of the complete liberaliz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for developed countries and 2020 for developing countries. Do you think leaders, meeting next year in Japan and then in the US, will address this issue? Perhaps, the only leader still there in the group is the Sultan of Brunei.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your assessment on what Obama's position might be regarding this issue.

A The first point to make is that, as the Obama administration reassesses its trade policy and sets its new priorities,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the Asia-Pacific region and US relations with Asia will be a top priority for the US trade representative and for the White House. I suspect that that will be spelled out in the President's speech as well. That will give a focus. The work that is being done in Singapore this week and in the coming months leading up to the APEC Ministerial and Leaders Summit in November will start setting the table for an initiative that will be carried forward in Japan and in the United States in 2011. Given President Obama's background, I suspect that he may want to have the APEC Summit in Honolulu which would make it a true Asia-Pacific meeting.

Now, in turns of substance, Bogor commitments were made in a

different era. Yes, the Sultan of Brunei was there and so were Hillary Clinton and Fred Bergsten. I don't think many people looked at how the APEC initiative has evolved and thought that there was going to be a remarkable transformation in 2010 and we would have free trade. Originally APEC consisted of 12 members and now it is 21. That increase in membership has made it much more difficult to reach consensus on anything in APEC, particularly on economic integration that involves countries of largely diverg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plus the political problems that have emerged by the membership of Russia, for example.

I think countries are now thinking about a more pragmatic and incremental approach to regional integration, recognizing the benefits of that integration in terms of boosting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 national economies through increased trade and investment, creating greater security of policy and removing customs and other types of red tape that raise transaction costs and impair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goods and services.

I think there also will be an attempt to meld together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hat have been promulgated by APEC members. Melding has a different meaning from harmonizing or linking. It provides more flexibility and adaptation. It goes back to some of the original concepts that George Yeo propounded more than a decade ago about the importance of regional integration and building up from a core group of countries, at that time he called the P5. Actually, at a talk at my institute, he said, "no, it should be called the P6 because it should include Korea." That type of process is still

proceeding now whether it is ASEAN +1, ASEAN +3, the 10 +6 proposals from Japan, or the various proposals for a Trans-Pacific Partnership that can take on several different forms. This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in the Obama administration. I can see it proceeding in part because, if you look at the small group of core countries (Singapore, Chile, New Zealand, Brunei, and now the US), many other important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lready have trade agreements with these countries: Korea has a trade agreement with almost all of them; Japan and China have agreements with many of them. I have been thinking that, perhaps, those who are interested in a Northeast Asia free trade linkage, who have worked on this for a long time, may find it easier to realize that goal through a somewhat broader regional initiative--one that would include China and provide a better way of accommodating the differences that arise when one works bilaterally with China particularly in the Japan-China, Korea-China, and US-China context.

I see some important work that can be done in APEC. APEC works on multi-year cycles. So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hat happens today sets the tone for what can be done next year in Japan and the following year in the US. Many of the major players in APEC have a reason to begin to make progress and this is the year to take advantage of the economic crisis to build for future growth through improved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That's an optimistic note to end my answer.

Q Could you make a quick assessment of NAFTA, particularly from

Mexico's point of view since their economic size is similar to Korea's size? There are a lot of misconceptions floating around in Korea that Mexico has suffered because of the agreement.

A Let me summarize a book that I wrote earlier on this issue. If I were to draw one lesson why Mexico has not been able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NAFTA, despite making substantial progress in reforming its policies in anticipation of the agreement in the 1990s, is because it did not follow up with the appropriate investment and adjustment in its own economy. That, in part, was due to the fact that within a year of entry into force of the NAFTA, Mexico fell into an economic crisis, the “peso crisis”. Mexico suffered through a very sharp recession a year after the NAFTA entered into force. The response to that economic crisis, though helped significantly by its partnership with the US and Canada, led Mexico to pursue an overly tight monetary and fiscal policy. Macroeconomic policy became very conservative; tight fiscal and monetary policy limited the possibility for investment, particularly in infrastructure. Also, it inhibited the political room for economic reform particularly in the energy sector. So, those were areas where Mexico fell short.

However, it was also instructive. The day that Korean officials shook hands on the KORUS FTA in April 2007, the Deputy Prime Minister introduced a proposal for substantial domestic economic reforms and investments to deal with the prospective challenges that would face the Korean economy as it opened up to more competition from the US. That is exactly what Mexico did not do and it was something that the US also did not do well; indeed, it's a problem

that President Obama now has to redress and has begun to do so through substantial investments in the stimulus package and in an expanded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The lesson is that you have to adapt your own national policies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created by the trade agreement. Those who do so at home can have reap the dividends abroad.

한-미 경제 파트너십: 세계적 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Jeffrey J. Schott

오늘 이 모임을 주선하여 저를 불러준 데 대하여 감사 드린다. 한국을 방문하여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일은 늘 큰 기쁨이다. IGE의 새 원장 남박사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은 특별한 영예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연사로 섰을 때 나는 무역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다. 보호주의적 압력이 점증할 것이고 무역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이 표류를 거듭할 것이라는 나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그대로 들어맞았다. 한-미 두 나라는 계속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양국간의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관점이다. 즉, 두 나라의 파트너십(partnership) 전반에 관한 문제와 세계적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잘 알려진 바처럼, 지금 우리는 대공황이래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최신 월간 자료에 따르면 다소의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지난 몇 분기 동안 있었던 급격한 하강국면에서 벗어나 힘찬 회복의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예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달 초 IMF는 2009년 세

* 이 글은 2009년 7월 21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임.

계의 총생산은 1.4% 줄어들고 2010년에 약하게 반등을 하리라고 예측했다. 미국의 GDP가 2.6%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끔찍한 일이다. 물론 일본과 유럽지역은 미국보다 더 큰 하락을 겪을 것이긴 하다. 중국과 인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겠지만 세계의 경기침체는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두 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보여 준 최고치의 성장률보다는 많이 떨어져있다. 상대적으로 반가운 소식은 2010년 세계경제는 견실한 상승세를 탈 것이지만 중국을 제외한 G-8 국가들은 무기력한 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란 IMF의 예측이다. 지난 6월 미국의 실업률은 26년 만에 가장 높은 9.5%를 기록했으며, 내년 초에는 1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경제대국에서 국내산업을 보조하고 보호하라는 압력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의 긍정적인 월간 무역통계 수치를 지나치게 믿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한국경제는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회복의 속도는 결국 세계경기의 회복 속도와 궤를 같이 할 것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IMF의 연간 평가보고서는 단기전망에서 한국 지식경제부의 전망보다 비관적이다. 한국의 GDP는 올해 3% 하락할 것이며, 미국처럼 2010년부터 약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IMF는 보고 있다. 또한 미국처럼 한국의 실업률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 일어난 세계 수요의 급락과 무역금융의 마비는 국제 무역을 강타했다. 지난 반년 동안 세계 무역은 24%가 줄었고, 이는 세계 총생산 하락보다 4배나 빠른 것이었다. 이것은 무역이 총생산보다 3배나 빨리 증가했던 지난 50년의 경험과 극명한 대조가 된다. 최근의 IMF 예측자료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의 세계 무역량은 금년에 12% 줄고 2010년에도 크게 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이며, 미래의 전망도 그다지 푸근한 것은 아니다.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 두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다. 지난주 내가 몸 담고 있는 연구소에서 래리 서머즈(Lawrence Summers)는 오바마 행정부가 발족했을 때의 경제를 “자유낙하 중”이라고 고백했다.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8천억 달러의 대대적인 부양책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미국 재무부와 연방정부는 주요 금융기관의 자본기반을 조성해주고, 급속한 파산과정 중에 있던 GM과 크라이슬러의 구조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입해야만 했다. 미국은 대규모 위기를 맞았으며, 아직 그 숲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바닥을 쳤고 조만간 회복국면에 들어가리라는 희망은 있다.

한국의 상황은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한국 정부는 산업을 받쳐주고 일자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광범한 개입을 해 왔다. 한-미 두 나라는 각기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해 나갈 것이지만, 세계경제가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두 나라 모두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핵심적 문제다. 두 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 각기 국내적으로 많은 일을 하겠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행하는 일들이 장기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세계적인 경제회복을 확고히 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장기간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가졌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내가 정부에서 일했을 때 세계경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유럽의 G-2 체제였는데 그것이 일본과 캐나다를 포함한 4국 체제로 진화를 했다. 그것이 이제는 주로 유럽 국가들인 G-7으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G-8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후 빈곤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이제는 공인된 경제적 수퍼스타가 된 많은 나라들의 경제적 중요성과 지배력의 확산을 본다면 위에

거론한 체제로는 충분치 않다. 한국도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고, 가까이 리더십의 책임을 감내하고 더 나은 세계경제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일하려는 국가집단에 속한다. 이것은 세계경제위기를 맞은 최근에 일어난 변화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G-20에서 의장단(Leadership Troika) 일원으로 지명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국은 국가간 공동보조에 의한 경제회복과 향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다자적 노력의 추진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과 미국의 파트너십은 이제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게 되었다. 두 나라는 양자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세계경제의 책임 있는 지도국으로서 협력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한-미간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한국의 국제사회 참여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은 영국 및 브라질과 더불어 G-20의 의장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2010년 처음으로 G-20 회의를 주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9월 하순 피츠버그에서 열릴 차기 G-20 회의에서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파트너십에 영향을 준 여러 요소들 중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의 창립자이며, 내가 속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매우 가까운 친구이고, 또한 한국 정부의 주요한 경제적 자문역인 사공일 박사의 공적이 매우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공 박사는 거시적 경제정책과 무역에 관한 G-20의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백악관의 래리 서머즈를 비롯한 G-20 국가의 최고위 경제관료들과 긴밀한 업무 관계를 갖고 있다. 그는 위기에 대한 거시경제적 대응책 마련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깊이 간여하고 있는 국제무역협상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G-20은 정치인들이 경제적 하강국면에서 새로운 보호주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세계무역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치인들이 흔히 보이는 첫 반응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외국 공급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국내적 경기부양책에 외국의 공급자를 차별하는 정부조달규정을 포함시키고, 경제침체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국내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는 단연코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새로운 무역자유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G-20은 보호주의의 철폐에 더하여 다자간 무역협상에 관한 도하 라운드(Doha Round)를 부활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한 폭 넓은 노력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 문제가 G-20과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쟁점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무역이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해결책 중 일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경제회복을 제한하는 문제거리의 일부가 될 것이다. 각국이 지속적으로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늘릴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주요 경제국에게 자국내의 보호주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수단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지만 내가 도하 라운드에 대하여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한-미 두 나라가 직면한 현안이면서 두 나라가 협력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토의할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며칠 전 나는 싱가포르에서 도하 라운드의 해법에 대한 처방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전략에는 미국과 G-20 국가들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이 처방은 G-8 지도자들이 공약한대로 2010년 말까지, 그러나 아마도 2011년 초까지 협상타결을 한다는 목표아래 농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협상을 새로 시도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목표이긴 하지만, 당사국 장관들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보내는 등 최종적인 도하 패키지 창출에 필요한 매우 집중적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조치가 9월에 피츠버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마도 G-20 정상회의 이전에 무역 정책에 관한 중요한 연설을 할 계획이며, 이 연설에서 그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폭넓은 대응책의 일환으로 무역을 들고 나올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지금 그의 국무장관이 된 힐러리 클린튼과 대결을 하면서 무역에 관해 쏟아낸 경솔한 말들 때문에 빚어진 우려와 불안을 상당히 씻어낼 것이다. 정치적 캠페인의 와중에서 나온 가혹한 언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한 후 달라졌다. 무역은 그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아니지만 그는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를 굳게 약속해 왔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하겠다.

점증하는 보호주의

이제 점증하는 보호주의의 급박한 우려에 대하여 G-20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세계적 경제 조건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이미 악화된 사태를 더욱 나쁘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려는 압력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은 아래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호주의 압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첫째,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이 시작된 후에도 실업은 늘어날 것이다. 기업들은 고객의 주문이 보다 확고한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급여인원을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에 완만한 경제성장이 다시 시작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불황 이전에 이룩했

던 경제적 생산수준에까지 이르려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거리의 사람들과 지역 기업들이 몇 년 전만큼 잘 나가고 있다고 느끼는 데에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기업을 돕고자 하며, 바로 그런 이유로 국가적 경기부양책은 국내적 내용의 사업에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중국과 다른 나라들도 이것을 본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과 지난 4월 런던에서 나온 G-20 정상회의 선언은 새로운 보호주의를 배격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사공일 박사 등 지도자들은 매우 강력하게 ‘스탠드스틸(standstill,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 공약을 앞장서서 밀고 나갔고, 그 뜻을 관철했다. 런던 정상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투자 또는 무역에 새로운 장벽을 쌓거나, 새로운 수출제한조치를 부과하거나, 또는 WTO 규정에 위배되는 수출촉진정책을 도입하는 것 등을 2010년말 까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이 약속과 어긋나는 조치는 WTO에 통보하고 즉각 바로잡기로 하는 내용을 한국 지도자들이 제안한 표현대로 합의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G-20 국가 중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G-20 참가자들은 예상보다는 더 잘했지만 세계적인 위기의 깊이와 폭을 감안할 때 그들이 응당 해야 할 만큼 잘하지는 못했다. 일부 G-20 회원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어겼으며, 그러한 조치 중의 일부는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무역 스탠드스틸도 잘못 이해되고 적용되었다. 일부 국가는 이것을 단순히 WTO 의무를 존중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WTO 규정아래서도

각국은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광범한 보호주의 조치를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되어있다. 더욱이 정부조달부문처럼 WTO 제재가 불완전하거나 결여된 분야에서 정부들은 WTO의 비난을 걱정하지 않고 외국 공급자들을 차별할 수 있다. 사실상 많은 스텐드스틸 위반사례가 이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바로 그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다자간 규제를 강화하는 WTO 협상이 필요하고, 도하 라운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기본 입장은 분명하다. 세계적인 위기를 맞아 국제무역과 투자를 왜곡하는 조치는 그것이 WTO 규정에 합당하든 안 하든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세계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향후 뻗어나갈 성장의 동맥을 틀어막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G-20 회의는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우선 스텐드스틸 선언을 공표하는 데서 출발했다. 지난 12월 나와 다른 무역전문가들은 WTO와 세계은행에게 이와 관련한 일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정상회의 공약을 위배하는 나라들을 “지적하고 질타하도록” 요청했다. WTO의 파스칼 라미(Pascal Lamy) 사무총장은 최소한 위반국가들을 지적하는 일을 떠맡았다. 현재 WTO는 금융과 경제위기, 그리고 무역과 관련한 진전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보고서를 내고 있다. 최근의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제한조치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우려했던 만큼 광범위하지는 않다는 데 안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G-20 정책의 공적 감시의 핵심은 잠재적인 악용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새로운 보호주의 조치의 남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와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한국은 이러한 현상유지 공약의 범위를 넓히고 그것이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공동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두 나라가 무역과 관련하여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자유화를 촉진하는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두 나라 정부가 피츠버그 회의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진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2010년 한국의 주도아래 진화하게 될 G-20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맡게 될 역할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몇 년은 세계경제의 운용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난 몇 년간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G-8의 영향력은 뚜렷하게 쇠퇴하고, 한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을 G-20의 신뢰성과 영향력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진척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한국과 미국 양자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더러 G-20 회원국의 약 절반이 APEC 지역 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경제 지배권의 권위와 힘의 일부 균형이 대서양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할 공동의 이익과 필요성을 지닌 또 다른 분야가 기후변화 문제이다. 기후변화는 매우 중요한 세계적 난제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모든 주요 가스배출국가들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주요 가스배출국가들이 획기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국가도 성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되 2020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할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 주고,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약속을 한 주요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공약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 앞장을 서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금융위기 초기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환경정책을 추진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를 최

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8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과 10개년 예산 청사진은 모두 재활사용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송전기술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행정부는 새로운 기후변화 입법의 통과에 많은 정치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최근 근소한 차이로 2009년도 미국 청정에너지 및 안전법 - 워싱턴에서는 왁스만-마키(Waxman-Markey) 법안으로 알려짐 - 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이 법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을 급속히 줄이는데 필요한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 제도 도입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조정기간 중 국내산업에 무료배출허용 배정이나 직접 보조금 등으로 많은 보조금이 들어간다. 하원이 가결했으나 이 법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책상에 도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 잘하면 상원이 10월까지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지만, 하원이 가결한 법안과는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 때문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합동회의는 금년 중 열릴 전망이다. 그러므로 미국 대표단은 2009년 12월의 코펜하겐 정상회의에 확고한 입법적 지침 없이 가겠지만 코펜하겐 회의가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그 지침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갈 것이다.

비슷한 과정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국은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미래로의 이동에 목표를 둔 새로운 “녹색 뉴딜”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코펜하겐 협정의 온실가스 방출에 대한 의무적 목표를 약속함으로써 지도력을 보여왔다. 새로운 세계적 협정을 확보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한국

의 이익은 매우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위치에 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전폭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계적 관리체제를 만드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부국이든 빈국이든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그 나라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개혁과 규제개혁에 나서도록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기후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는 공짜였던 탄소의 가격을 상품에 보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탄소가격의 수준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생산하는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서 자원의 재할당과 재배분이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세계적인 기후관리 체제를 창설하는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산업국가들은 온실가스를 방출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급격히 가스 방출량을 늘리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그렇게 많은 양을 배출하기 시작한지가 몇 십 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하다. 여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할 새로운 기술과 오염통제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늘리기 위해 부국에서 빈국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은 폭넓은 파트너십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추구라는 양국의 세계적 야심과 국가적 경제정책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 이것은 양국관계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코펜하겐 협정을 창출하고 협정의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한 시점이므로 양국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욱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코멘트

사회자가 모두발언에서 강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연단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 대다수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듣고 싶어하는지 의문이다. 내가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뒤로 미룬 이유는 단순하다. 내가 방금 이야기한 거시적인 세계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협력을 통하여 만들어진 양국간의 우의는 현안과제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출범하는데 양국이 결속을 강화하며 남은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앞으로 6~9개월 안에 미국 의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런 전망에 내 목숨을 걸 수는 없지만, 내가 낙관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킨 이 협정의 자동차 조항과 미국과 한국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다른 조항들은 처음부터 잘못 제기된 것이었으며,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생산과 고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 신빙성이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조인된 지는 2년이 넘었으며, 그 이후 자동차 부문의 생산과 고용은 급격한 축소를 겪었다. 금년도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연간 기준으로 950만대를 다소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몇 년 전의 1천7백만 대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 3대 메이커의 판매는 2008년에 비해 40%나 줄었다. 이에 비해 현대와 기아가 미국시장 판매에서 소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시장에서 마케팅을 잘 하면 기업에 도움이 되고, 파산을 하면 판매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한국 시장의 자동차 판매는 약간 줄었지만 자동차 수출시장의 수요가 둔화되면서 자동차의 국내생산은 크게 줄어들었다. 자동차와 SUV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한-미 무역협정에서 추구하던 몇 가지 목표는 시장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의 소형트럭 관세를 철폐하려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 25%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되어있다. 그 목적은 한국의 SUV 생산설비에 투자를 장려하여 미국과 다른 주요시장에 이를 수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SUV 시장의 수요는 붕괴했다. SUV 차량을 사는 사람이 이제는 그리 많지 않으며,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한국이나 여타지역에 새로운 SUV 생산설비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해 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러나 GM 및 크라이슬러의 파산과 경쟁 상황에 영향을 주는 회사들에 미국 정부가 퍼부은 막대한 액수의 보조금 등 다른 측면들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많은 비판을 무효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그러한 비판은 그다지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낙관하는 둘째 이유는 한국과 EU 자유무역협상이다. 한국-EU 자유무역협상의 조인과 이행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시장의 미국 자동차메이커들에게 경쟁적인 도전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나의 동료인 프레드 버그스텐(C. Fred Bergsten)은 경쟁적 자유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경쟁적 자유화의 명쾌한 사례이다. 미국이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게 되자 유럽은 한국 시장에서 유럽기업들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고, 보다 개방적인 경쟁에서 오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상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이다. 미국 의회는 자유무역협정 기준을 지체함으로써 미국이 무역협상의 이익을 거두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뒤따라 온 유럽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미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을 제치고 한국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

다. 나는 이것이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제기해야 할 매우 분명하고 직접적인 쟁점의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등한 경쟁조건을 갖느냐 하는 문제이며, 하원의원들의 수수방관으로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일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의회비준 속도를 재검토하고 재평가하는데 강력한 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의 북한상황이다. 최근의 북한상황은 한-미 두 나라의 상호 안보이익을 위해 동맹관계 강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 교훈은 지난 반년간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여러 차례 회합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금년 2월 한국을 방문한 클린턴 국무장관과 한국 정부의 회합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두 나라 정부의 고위관리들의 잦은 접촉을 통해 계속되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양자 동맹관계를 감안할 때 주요 무역협정의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 마찰을 빚어서 사소한 통상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의회의 의견을 한-미 자유무역협상 지지 쪽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취임 첫해의 오바마 대통령은 근본적인 의료개혁과 기후변화 입법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면 문제가 조금은 복잡해질 것이 뻔하다. 그러나 금년 말은 아닐지라도 내년 초에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 G-20회의 참석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 할 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의회비준 소식을 가져오는 적기가 될 수 있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것이 두 나라의 파트너십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고히 하고, 앞으로 두 나라의 상호이익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질문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하여 두루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보다 깊고 관념적인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한다. 우선, 사공일 박사와 이명박 대통령이 “스탠드스틸”의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합의를 한다 해도 그러한 합의의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탠드스틸 자체는 매우 부족한 것이다. 국내외적 각종 압력을 감안할 때 그들이 왜 스탠드스틸을 요청했는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스탠드스틸보다 더 큰 약속을 정부들에게 요청했어야 했다.

둘째, 지적인 바와 같이 무역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나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문제에 대하여 묻겠다. 아시겠지만 재귀시 바그와티(Jagdish Bhagwati) 교수는 열렬한 세계적 자유무역지지자이지만 자유무역협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가 파악한 문제의 하나는 166개국 이 모이고 수천 쪽의 문서(대부분 읽히지도 않은)가 쌓이면 어떤 진척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제안된 모든 것에 이의를 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척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G-20은 합의를 이루는 데 다소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는 세계적 합의에 도달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양자간, 3자간 협정에 기본적 기준을 두는 것이다. 합의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세계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메커니즘(mechanism)을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그것은 다음 번 이 자리에서 내가 강연할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온전하게 답변하자면 45분이 다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강연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에 관해 간략하게 미리 이야기 해 보겠다. 우선 질문자가 스탠드스틸이 불완전하다고 한 것은 맞는 말이다. 그 때문에 나는 이 합의가 오해되고 잘못 적용되었

다고 말한 것이다. 무역관련 관료들이 모이면 그들은 여전히 국경 장벽(관세와 그 비슷한 것들)에 관해 일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오늘날 대부분 지역에서 관세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GATT 및 WTO 협상과, 양자간 및 역내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광범한 진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농업을 비롯한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진정한 문제와 주된 왜곡은 국내적인 규제를 통한 차별적 관행에서 온다. 국내적인 규제를 조화시키는 국제적 합의를 이룩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제는 각국의 상이한 유권자들에게 자원을 배분하도록 마련된 것이고, 그 나라의 특수한 조건에 맞도록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공통의 규제관리체제를 갖기로 했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규제정책의 조화를 추구해 온 미국/EU를 예로 들어 보자. 미국과 EU처럼 높은 수준에 와있는 나라들도 약품규제나 기타 경쟁규제 유형을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현재의 규제상황에 기반하여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규제를 바꾸면 투자의 가치가 훼손된다. 이런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나는 미국과 EU의 관리들에게 규제를 조화시키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아직 규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이미 투자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규제의 변화에 반대하는 이익집단이 생길 수 있는 신기술 분야에서 먼저 시작하라고 권유한다.

세계적 자유무역에 이르는 문제에 관한 둘째 코멘트에 답하겠다. 세계에 너무 많은 나라가 있는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30여 년 전 맥도날드 대사와 내가 협상을 하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얻은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많은 나라들이 무역협상에서 다소의 혜택을 얻어내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 대부분은 도하 라운드에서 그다지 할 일이 많지 않다. 제네바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해 보면 진짜 병목현상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조화시키기 어려운 주요 이해관계를 가진 10~15개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도적 국가들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합의(양자, 지역, 또는 다자간)는 나오지 않는다. 한국도 이제 이 그룹에 들어갔다. 내가 주도적 국가들 간에 제휴관계를 구축하는 일, 경쟁관계에 있는 경제권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는 일, 그리고 특히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계무역시스템에서 우리는 이제 제휴의 정치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전의 다자간 협상보다 협상하기가 더욱 복잡해졌다.

세계적 자유무역은 WTO의 궁극적 목적이지만 WTO는 이를 성취할 권능이 없다는 그 다음 질문의 논점으로 넘어가겠다. WTO 종사자들이 알아낸 것은 그들이 다루는 문제의 대부분은 전적으로 무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상 무역은 문제의 근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왜곡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여러 분야의 각국 정책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권능은 WTO에도 없고 각국 통상장관에게도 없다. 이런 일을 하려면 앞으로 WTO가 일을 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또 누구를 상대로 일을 하는지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국별 정부 운영체제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자신이 겪은 미국에서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여러 기관 사이에는 거대한 방화벽이 있다. 이런 부처들은 공동으로 일을 해야 하지만 때로 관료적인 우선순위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질문 세계경제의 현황과 한-미 관계의 전망에 대한 포괄적인 최신정보에 대하

여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3가지 질문을 하겠다. 먼저 G-20에 관한 것이다. G-20 정상회의의 발족은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귀하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 숲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최소한 바닥을 친 것 같고, 세계경제에 대한 우리의 전망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G-20의 의제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와 내년 초 한국에서 열릴지도 모를 정상회의 의제의 초점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G-20이 영구히 G-8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모두가 알듯이 현재의 G-20 정상회의는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

둘째, 기후변화 문제이다. 귀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금년 12월까지 탄소배출에 관한 타협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코펜하겐에서 회합을 가질 국제사회도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관리체제에 관한 협상타결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협상 일정이 그 이후로 연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협상의 타결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셋째,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것이다. 이 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 전망이 밝다니 매우 반갑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이 협정을 보완할 부수적 협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부수적 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원래대로 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서 빛어진 마찰이 미국 의회 비준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는가?

답변 먼저 G-20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겠다. G-20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보다 안정된 제도적 역할을 갖게 될 것이냐는 물음을 내놓을 단계에 왔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 피츠버그 정상회의 의제 중에서는 여전히 국제적인 금융개혁을 위한 시급한 조정과제와 향후전망, 도하 라운드의 부활문제 등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각국의 통상각료들이 도하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를 의논하고 있으며, 많은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신임 인도 상무장관은 9월 초 뉴

델리에서 통상장관들의 모임을 주재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협상의 양태, 제네바 협상 규칙을 위한 농업과 제조업에 관한 기술적인 어휘 등 합의의 장애를 극복할 여러 가지 구상들이 다듬어질 수 있을 것이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무역에 관한 건설적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협상데이블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G-20 정상회의는 과거의 성취를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 제도적인 이유로나 실질적인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스탠드스틸의 내용을 보완하고 도하 라운드를 진전시키는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년의 서울 회의에서 진척의 기준들이 달성되었는지 평가하여 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타협을 위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G-20의 장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G-20의 제도적 측면을 최선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한국, 미국 그리고 그 밖의 곳에서 내년 가을과 겨울에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토론과 브레인 스톰을 가질 필요가 있다. G-20이 G-8을 대체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제도는 해체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근의 빈약한 성과를 고려할 때 계속해서 G-8에 많은 신임을 부여하기도 어렵다. G-8은 그렇게 효율적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G-8을 넘어선 다른 개량된 제도에 더 우선권이 부여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기후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여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지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다. 기후변화 입법에 대하여 금년 중 하원이 하고자 하는 일과 상원이 하고자 하는 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상원과 하원의 이견은

전반적인 목표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이한 유권자 집단 사이에 고통을 분배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런 집단을 무료배정을 통해 보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세금지출을 통해 보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입법이 지체되어 아마도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원은 200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을 20% 감축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 이것은 금년 12월 코펜하겐 협약의 일반적인 조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코펜하겐의 협상대표들은 이런 목표에 미달할 것이고, 기껏해야 구체적 수치가 없는 잠정안에 합의할 것이며, 구체적 수치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가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까지 이런 진척이 제한적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개발도상국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으로부터 확고한 약속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부수조약에 대한 물음에 답하겠다. 오바마 행정부가 협정의 재협상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있었지만 재협상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된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현재 양국 고위관리 간의 양자적 협의는 자동차 부문을 포함한 우려의 대상이었던 부문에서 호혜적인 양자간 협력 협정 등으로 FTA를 강화하는 방안이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엔진기술, 오염 통제기술을 개발하는 공동노력을 목표로 한 협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이런 일들은 이미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은 이미 미국의 제휴사와 일을 시작했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미국 유권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할 좀 더 강력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쇠고기 문제는 거의 모든 쟁점을 해결했다. 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상원 금융위원회의인 맥스 보커스(Max Baucus) 의원이 좀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인데, 실은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기를 원하고 있다. 앞서 말한 여러 이유로 협정은 비준 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 협정비준 문제는 곧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고, 비준을 원하는 보커스 상원의원이 협상이 잘 마무리 되도록 미국과 한국의 관리들과 협력을 할 것이다.

질문 좀 다른 질문을 하겠다. 몇 달 전에 내가 읽은 논문에 의하면 미국의 총부채는 미국 GDP의 350%에 달한다고 했다. 이것은 공공부문, 기업 그리고 소비자의 부채를 모두 합한 것이다. 지금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제침체의 궁극적이고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미국의 소비자가 이 부채를 상환한다면 세계무역은 둔화되고 경제회복 속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참고 삼아 말씀 드리다면 금년 3월 기준으로 한국의 총부채는 GDP의 26%이다. 만일 우리가 출구전략으로 부채를 갚아서 부채액을 줄여야 한다면 적절한 부채는 GDP의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며, 그 수준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적정부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내가 책임자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별로 연구도 안 한 문제에 대하여 무턱대고 아무 말이나 해서 쟁점을 흐려놓고 싶지 않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부채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저축은 늘어나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향후 10년이나 그 이상 추정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자가 보다 덜 구매를 할 때 이것이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은 무역의 구성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이 더 투자를 하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무역을 하게 되지만 다른 종류의 제품이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의 휴대폰은 성능이 좋지 않아 더 좋은 휴대폰을 필요로 하지만 아마 휴대폰을 덜 사게 될 것이다. 미국인들은 한국에서라면 어린이들도 거들떠 보지 않는 구

식 휴대폰을 쓰고 있으며, 그런 구식 모델의 휴대폰이 미국에서 팔릴 것이다. 이처럼 무역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의문은 이러한 투자가 더 높은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무역량이 더 늘어날 것이냐는 것이다.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이고, 지난 10년간 미국을 도취하게 만든 개인소비와 수입수요의 유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성장기반의 재정비와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구조조정을 못하고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향후 몇 년 내는 아닐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인플레이션 폭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가 대두하고 있고, 버넝키(Bernanke) 의장은 미국이 이런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조만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증할 것이라고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한국의 태양에너지 개발에 대하여 코멘트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두 당사국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협정이 통과될 것인지를 가능하는 시범적 협정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는 태양에너지 기업을 지원하려 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체 에너지에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답변 한-미 무역협정 협상 당시 미국은 이것이 이 지역에서 또 다른 협정을 유발할 것이며, 그것은 우선 한-EU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단기적으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상에서 빠른 진척을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일본 정부는 정치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고, 총선이 끝난 후에도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을 것이며, 2004년 이래 협상을 교착상태로 몰아넣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일본 정부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남게 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면, 나는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무엇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나라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 상업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의 작업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잠정적인 협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타협이 가까운 장래에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그것이 도하 라운드의 부활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태양에너지와 보조금 문제에 관해서 말한다면, 기술을 위해 기업에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효과가 있어야 한다. 송전 그리드(grid)를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바이오 연료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은 투자 신호에 왜곡을 초래하여 비경제적인 투자와 생산 결정을 야기했다. 우리는 앞으로 보다 엄격한 시장통제를 수반한 민간-공공 제휴관계가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스마트 그리드 송전기술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BM이 이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 두 나라가 협동과 혁신을 통해 혜택을 함께 볼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

질문 APEC 회의에 참가했다 오셨으므로 APEC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다. 16년 전인 1993년 미국은 시애틀에서 APEC 정상회의(Blake Island Leadership Meeting)를 개최했는데 그 때는 클린턴 행정부 출범 첫해였다. 당시 클린턴은 이 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그 이후 훌륭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금년도 이 모임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후 내년에는 일본, 그 다음은 미국에서 열리도록 되어있다.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시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보고르 성명은 2010년까지는 선진국에서, 2020년까지는 개도국에서 무역과 투자의 완전한 자유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내년의 일본과 그 다음해 미국에서 지도자들이 모임 때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모임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도자는

아마 브루네이의 술탄 뿐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는지 묻고 싶다.

답변 먼저 지적해 둘 일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정책을 재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면서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사실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백악관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미국-아시아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놓을 것임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런 점이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표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작업과 11월의 APEC 각료 및 지도자 회의까지 몇 달간 이루어질 작업을 통해 2011년 일본과 미국에서 추진될 의제에 대한 준비가 시작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배경을 감안한다면 APEC 정상회의는 진정 아시아 태평양 회합이 될 수 있도록 호놀룰루에서 열기를 원할 것이라고 본다.

보고르 공약은 다른 시대에 만들어졌다. 그 회의에는 브루네이의 술탄이 참석했었고, 힐러리 클린튼과 프레드 버그스텐도 참석했었다. APEC의 발의사항이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지 살펴보면 2010년에는 획기적인 변모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자유무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지는 않는다. 원래 APEC 회원국은 12개국이었으나 지금은 21개국이다. 회원국이 늘어남에 따라 APEC에서 어떤 문제에 합의를 도출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 특히 경제발전단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국가들이 개입되는 경제적 통합문제가 그러하고, 러시아의 회원가입으로 야기된 정치적 문제가 그러하다.

지역통합에 대하여 각국은 지금 보다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통합의 혜택을 무역과 투자의 증가를 통한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진, 정책의 더 큰 안정성 조성, 그리고 거래비용과 각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관습과 여러 가지 관료주의 폐해를 제거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이 공표한 양자간 및 지역간 무역협정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합(melding)에는 조화(harmonizing) 또는 연계(linking) 등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보다 융통성이 있고 응용의 여지가 있는 말이다. 이 말은 10여 년 전 싱가포르 외교통상장 조지 여(George Yeo, 楊榮文)가 지역통합의 중요성과 당시에 P5로 명명했던 태평양지역 핵심그룹 국가의 형성을 제안하면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우리 연구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한국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P5가 아니라 P6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ASEAN +1, ASEAN +3, 일본이 제안한 10+6, 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 범태평양 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제안 등 이런 유형의 과정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도 이에 대해 주목을 해왔다. 나도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다.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그리고 이제 미국 등 소수의 핵심국가들을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다른 많은 주요국들이 이 나라들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한국은 이들 국가 대부분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고, 일본과 중국도 여러 나라와 협정을 맺었다. 동북아시아 자유무역 연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 이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은 보다 광역의 지역통합방안에 의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을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중국, 한국-중국, 미국-중국 등 중국과 양자적 교섭을 할 때 일어나는 어려움을 더 잘 조정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나는 APEC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한다. APEC은 매년 주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내년 일본에서, 그리고 그 다음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의 기초를 정하게 된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APEC의 여러 주역 국가들은

지금 전진을 시작할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역내무역과 투자개선을 통해 미래의 성장을 구축하는데 현재의 경제위기를 이용할 때이다. 내 답변을 이런 낙관적인 말로 맺고자 한다.

질문 멕시코와 한국의 경제규모는 비슷하다. 멕시코의 시각에서 NAFTA를 간략히 평가해주기 바란다. 한국에서는 지금 멕시코가 NAFTA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여러 가지 오해가 떠돌고 있다.

답변 이 문제에 관하여 내가 쓴 책을 요약해서 답변하겠다. NAFTA를 예상하고 1990년대에 정책개혁에 착수하여 큰 진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이 협정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없었던 것에서 교훈을 하나 도출한다면, 그것은 멕시코 경제에 적정한 투자와 조정이 후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적 이유는 NAFTA가 발효 된지 1년 만에 멕시코가 “폐소위기”라는 경제적 위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NAFTA가 발효된지 1년 후 멕시코는 급격한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큰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추구했다. 거시경제정책은 매우 보수적이 되었다. 긴축 통화 및 재정 정책이 투자, 특히 인프라 부문의 투자 가능성을 제한했다. 또한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경제개혁의 정치적 여지가 없어졌다. 이 두 부문에서 멕시코는 부진했다.

그러나 2007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조인되던 날 부총리는 한국이 미국의 경쟁에 보다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처하게 될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국내적 경제개혁과 투자 방안을 소개했다. 멕시코가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또한 미국이 잘 하지 못한 일이기도 하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시정해야 할 처지이고 그

는 경기부양책과 광범한 무역조정 지원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그 일을 시작했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주어지는 무역과 투자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훈이다. 국내적으로 이런 준비가 있는 나라는 해외국가들에게 그 이득을 챙기게 할 것이다.

부 록

《세계경제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1. Occasional Paper Series

00-01	한미관계: 현황 및 향후 전망	Stephen W. Bosworth
00-02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양 수 길
00-03	금융감독의 세계적 조류	이 용 근
00-04	성장하는 아시아와 침체 속의 일본	Kenneth S. Courtis
00-05	세계금융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Morris Goldstein
00-06	시애틀 이후의 WTO와 한·미 FTA 전망	Jeffrey Schott / 최인범
00-07	다자간 국제경제기구의 미래와 전망	Anne O. Krueger
00-08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Marcus Noland
00-09	Knowledge 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00-10	미국 新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경제 정책방향	C. Fred Bergsten
01-01	2001년 미국, 일본경제와 아시아	Kenneth S. Courtis
01-02	부시행정부의 對韓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1-03	3C를 극복하자	Jeffrey D. Jones
01-04	하이테크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경제	John Naisbitt
01-05	한국과 IMF	Stanley Fischer
01-06	한국경제의 향후 10년	Dominic Barton
01-07	세계 달러본위제도와 동아시아 환율딜레마	Ronald McKinnon
01-08	新국제질서 속의 유럽과 한국	Pierre Jacquet
02-01	금융위기 再發, 어떻게 막나.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Carlos Massad
02-02	세계경제의 기회와 위험	Martin Wolf
02-03	미·일 경제현황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2-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가능성과 위험	Allen Sinai

02-05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The Rt. Hon. Patricia Hewitt MP
02-06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02-07	아시아지역의 통화·금융 협력	Barry Eichengreen
02-08	세계경제, 회복되나?	Kenneth S. Courtis
02-09	미국 경제와 달러의 장래	Marcus Noland
02-10	도하라운드: 문제점과 전망	Jagdish Bhagwati
02-11	2003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Paul F. Gruenwald
02-12	미국경제 현황과 세계경제의 앞날	John B. Taylor
02-13	9·11사태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	Thomas C. Hubbard
02-14	미국 경제, 달러 및 대외통상정책 방향	C. Fred Bergsten
02-15	미국의 IT산업 관련 정책과 한국	Peter F. Cowhey
03-01	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Allen Sinai
03-02	OECD가 본 한국경제	Donald Johnston
03-03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Charles Morrison
03-04	세계경제 전망과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	Phil Gramm
03-05	침체된 독일·유럽 경제가 주는 정책적 교훈과 시	Hans Tietmeyer
03-06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04-01	20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04-02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Marcus Noland
04-03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美·日관계	Hugh T. Potrick / Gerald Curtis
04-04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Dominic Barton
05-01	대통령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	Peter F. Cowhey
05-02	아시아 경제·무역환경, 어떻게 전개되나	Dominic Barton
05-03	2기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 및 시장 전망	Allen Sinai
05-04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	Fukagawa Yukiko
05-05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보는 한국	Thomas Byrne
05-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역할과 전망	Anne O. Krueger

05-07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Wendy Dobson
05-08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Robert Scollay
06-01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앞날	Philip K. Verleger
06-02	2006년 미국경제/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6-03	한-미 FTA :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06-04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일 FTA	Oshima Shotaro
06-05	일본 경제회생과 한국경제	Fukagawa Yukiko
06-06	세계 M&A시장 현황과 전망 : 우리의 대응	Robert F. Bruner
07-01	한-미관계 :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Edwin J. Feulner
07-02	통일 이후 독일 경제침체의 교훈	Juergen B. Donges
07-03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07-04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ngel Gurria
07-05	동아시아 FTA 가능한가? : 중국의 시각	Zhang Yunling
07-06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	Fereidun Fesharaki
07-07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 Krueger
07-08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 전망과 과제	Fukagawa Yukiko
07-09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글로벌 기업 전략	Ben Verwaayen
07-10	한-미 FTA : 미국의 시각	Jeffrey Schott
07-11	한-미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08-01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 Krueger
08-02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Allen Sinai
08-03	유럽의 경제침체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08-04	차기 미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세계적 도전	James A. Baker III
08-05	일본 증권시장의 현재와 전망	Astushi Saito
08-06	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어떻게 전개되나?	Phil Gramm
08-07	세계 및 아시아 경제·금융 전망	Charles Dallara
08-0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하나?	Guy Sorman
09-01	2009년 한국 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 경제 전망	Subir Lall

09-02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3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 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rey Schott
09-05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2. 세계경제지평

94-01	유목적 세계의 도전	Jacques Attali
94-02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混在	이 영 선
94-03	기회와 위협으로서의 中國	김 완 순
94-04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5	화폐의 종말/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홍기택 / 주한광
94-06	UR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	유 재 원
94-07	환경과 무역	나성린 / 김승진
94-08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 중 윤
94-09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의 선택	사공 일
94-10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 종 석
95-01	한국경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 도전과 기회	사공 일
95-02	기업의 세계화와 경쟁규범	김 완 순
95-03	무엇이 세계화인가	김 병 주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ey
95-05	세계경제는 좌초할 것인가	김 적 교
95-06	엔화강세 지속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박 진 근
95-07	세계화와 한국경제: 호황인가 거품인가	구 본 호
95-08	확산되는 특혜무역협정과 정책과제	남 중 현
95-09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홍 원 탁
95-10	일본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그 효율성	이 중 윤
95-11	국제경쟁력의 갈등	이 재 응
95-12	해방후 우리 경제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김 광 석

96-01	국내 선물시장의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중소기업시대 열릴 것인가	유 동 길
96-03	단체교섭제도 有感	배 무 기
96-04	세계화와 기업의 변신	지 청
96-05	우리나라 금융시장개방의 추진방향	박 영 철
96-06	다변주의 對 지역주의, 兩立은 가능한가?	김 세 원
96-07	派生金融商品의 위험과 효용	민 상 기
96-08	최근 경제위기감의 실체와 대응방향	김 광 석
96-09	경제발전, 제도개혁, 경쟁질서의 확립	이 성 섭
96-10	轉機를 맞이한 정부의 기능	김 병 주
96-11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김 완 순
97-01	노동법개정 難局의 해법: 교섭창구 단일화를 前提한 複數勞組 허용	김 수 곤
97-02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김 적 교
97-03	韓寶사태의 敎訓	이 재 응
97-04	세계화시대의 경제운영	남 덕 우
97-05	기업성장의 虛實: 韓寶事態에서 얻는 敎訓	지 청
97-06	북한의 식량난과 집단농장체제	문 팔 용
97-07	한국의 금융개혁	윤 계 섭
97-08	高齡化 社會의 도래와 財政危機	박 중 기
97-09	外換危機의 일반모형을 감안한 우리의 대응방향	박 진 근
97-10	벤처기업시대를 열어가려면	유 동 길
98-01	한국의 經濟奇蹟은 끝날 것인가?	남 중 현
98-02	파라다임의 대전환없이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송 대 희
98-03	기업구조조정과 바람직한 은행-기업관계	남 상 우
98-04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모색과 사외이사의 역할	이 영 기
98-05	고투자-고저축 고리의 단절을 위한 제언	이 영 탁
99-01	연금개혁의 전망과 과제	박 중 기

99-02	지하철과업과 다시 보는 노조전임자 문제	김 수 곤
99-03	금융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박 준 경
99-04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과제	김 중 기
99-05	소득분배 문제의 실상과 대응방향	김 광 석
00-01	2000년 경제전망 및 향후 과제	김 준 경
00-02	세계금융체제에 관한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사공 일
00-03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사공 일
00-04	高비용 低능률 구조의 부활	이 중 윤
00-05	아시아 경제회복, 지속될 것인가?	사공 일
00-06	국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조 윤 제
00-07	기업경영 감시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이 재 응
00-08	미국의 구조조정 경험과 교훈	이 영 세
01-01	한국산업의 경쟁력 위기와 향후 진로	김 도 훈
01-02	주 5일 근무제 도입 신중해야	박 영 범

3. 연구보고서 (세계경제 시리즈)

94-01	UR 이후 아·태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 재 원
94-02	환경-무역관계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김승진 / 나성린
94-03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 중 윤
94-04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 중 석
95-0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대응	주한광 / 김승진
95-02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기업: 한·일 기업의 수명가능성 비교	이 재 규
95-03	WTO 체제와 우리의 대응	김 지 흥
96-01	국내선물시장에 대한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일본산업의 네트워크구조와 그 효율성	이 중 윤
97-01	루마니아의 경제현황과 주요개혁과제	김광석 / 김병주 / 고일동
98-01	우리경제의 成長要因과 成長潛在力 展望	김 광 석

98-02	한국과 ASEAN諸國間 무역구조의 변화추이와 대응방향	김 승 진
98-03	The Global Trading System: Challenges Ahead	
		Wan-Soon Kim / Nakgyoon Choi
98-04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방안	박 중 국
00-01	Financial Crisis and Industry Policy in Korea	
		Young Sae Lee / Young Seung Jung
01-01	한국에서의 기술이전과 정보의 역할	이 영 세
01-02	우리나라의 산업·무역정책 전개과정	김 광 석

4. 초청강연자료 (특별강연 시리즈)

94-01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2	미국과 일본간의 기술경쟁과 한국에 미친 영향	Ronald Morse
94-03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Toyoo Gyohten
94-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Allen Sinai
94-05	국제환율제도 이대로 좋은가	John Williamson
94-06	The Promises of the WTO for the Trading Community	Arther Dunkel
95-01	멕시코 폐소화 위기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Charles Dallara
95-02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3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urow
95-04	미국-북한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5	미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James Baker III
95-06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Krueger
95-07	동북아경제권 개발 전망-일본의 시각	Hisao Kanamori
96-01	Prospects of Global Economy in 1996	Allen Sinai
96-02	유럽연합(EU)의 앞날과 세계경제	Örström Möller
96-03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4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96-0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W. Clausen

97-01	다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7-02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J. Perry
97-03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K. Hunn
98-01	범 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M. Graham
98-02	변화속의 안정: 새로운 한·미 관계의 모색	W. Anthony Lake
98-03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중심으로	Donald P. Gregg
98-04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독일 통일의 교훈	Juergen B. Donges
98-05	세계화와 종족화-20세기 말의 딜레마	Guy Sorman
99-01	북한의 정치·경제상황과 동북아 안보	Marcus Noland
99-02	엔-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	Kenneth S. Courtis
99-03	한국과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Donald Johnston / Hubert Neiss
99-04	미국과 일본 경제의 비교 평가	Hugh T. Patrick
99-05	세계경제: 도전과 전망	Rudiger Dornbusch
00-01	금융세계화, 어떻게 대처하나	James P. Rooney
00-02	2000년 국제금융 및 신흥시장 전망	

Charles Dallara / Robert Hormats

5. 전문가 진단

- 한국 FTA 정책의 虛와 實 남중현
-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s on the Korean Economy & Other Things William Oberlin
- 세계속의 한국경제 : 과제와 전망 사공 일 編

6. 기타 보고서

-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사공 일 編
-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編
- Major Issues for the Global Trade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編

- 탈냉전시대 韓美 정치·경제협력관계 사공 일 / C. Fred Bergsten 編
- 새로운 韓美 협력체제의 모색 사공 일 / C. Fred Bergsten 編
- 세계화시대의 英美관계 사공 일 / C. Fred Bergsten 編
- 한반도 통일 및 韓美 관계의 현황과 과제 사공 일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I) 세계경제연구원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I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un(IV)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반도체산업의 발전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계경제연구원 編
- 한국의 금융개혁 세계경제연구원 編
-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사공 일 / 김광석 編
- The Fifty Year of the GATT/WTO: Past Performance and Future Challenges 사공 일 / 김광석 編
-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사공 일 / 구영훈 編
- 아시아 금융위기외 한·미관계 세계경제연구원 編
- For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ASEM Vision Group
- 제6차 한·미 21세기 위원회 보고서 세계경제연구원 編
- 동북아시아포럼 2000 세계경제연구원 編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사공 일 / 왕윤중
-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세계경제연구원 編
-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PG서울보고서) Emerging Markets Encinent Persons Group 編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 세계경제연구원 編
- 새로운 세계질서: 기회와 도전 -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의 앞날 -

-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III) 세계경제연구원 編
 - 한국 경제의 진로 -
- 세계경제연구원 개원 10주년 국제회의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환율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경제 John Williamson
- 아시아 화폐단일화, 가능한가? Robert Mundell
- 창업활성화, 어떻게 하나 세계경제연구원 編
-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Berry Eichengreen
- 미국의 힘은 얼마나 강하며, 중국의 부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Paul Kennedy / Bernard K. Gordon
- 2006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Richard N. Cooper / George Scalise
- 아시아 경제통합과 세계 속의 한국경제 Eisuke Sakakibara / Charles Dallara
- 2007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Guy Sorman / Tarun Das
- Globalization and Korean Financial Sector (세계화 시대의 한국 금융산업)
세계경제연구원 編
- 2007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David Hale / Jerald Schiff
- 2008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Robert C. Pozen / Jeffrey R. Shafer
- Lessons from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ts Implications for the
 World and Korea 세계경제연구원 編
- 2009 IGE/Prudential International Finance Lecture Danny Leipziger / Anne O. Krueger

**2009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

2009년 10월 28일 인쇄

2009년 10월 28일 발행

발행인 남종현

발행 세계경제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인쇄 오름시스템(주) 2273-7011

ISBN 978-89-86828-63-4

정가 10,000원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 개인회원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 행사 참가비 할인
 -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 가입 문의
 -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세계경제연구원
 - 연락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 E-mail: igenet@igenet.com
 - <http://www.igenet.com>

LED로 잡았다, 살아 있는 그대로!
삼성 파브 LED
하이퍼리얼 화질



Come and See! 세계1위 삼성 파브 LED, 한국은 물론 전세계 판매 10대 중 9대는 삼성 파브 LED. 매장에서 그 차이를 확인해 보십시오.



LED 하이퍼리얼 화질

LED와 수십만개 LED 미러가 만든 살아있는 화질

LED 핑거슬림

TV의 옆면 전체가 손가락처럼 얇은 핑거슬림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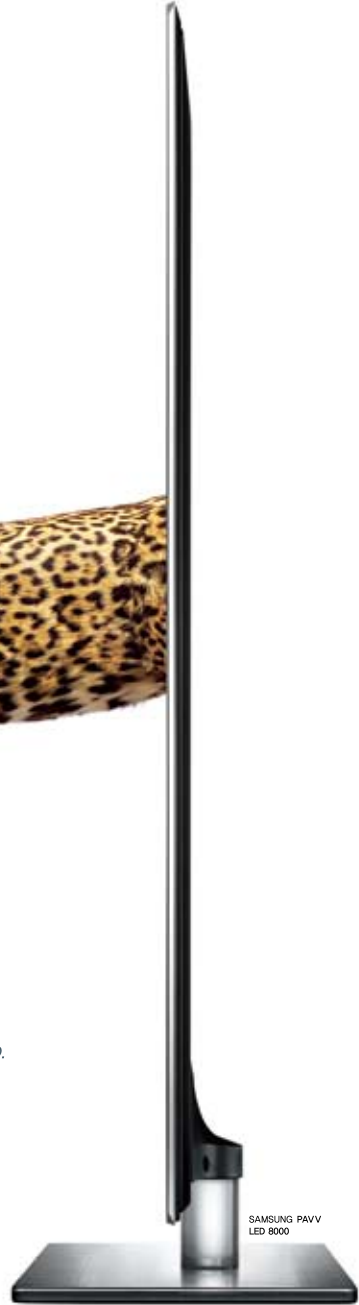
LED 에코절전

전기료를 40%까지 줄인 친환경 TV

※ 미국 점유율 94.8% (미국 NPD 2009년 상반기 수량 기준)

※ 한국 점유율 91.3% (한국 GIK 2009년 7월 누계 수량 기준)

※ LED Backlight 제품 제형 및 소재 실면해 기준



SAMSUNG PAVV
LED 8000

빛의 TV Samsung PAVV LED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 SAMSUNG

IGE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TEL : (02) 551-3334/7, FAX : (02)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Website)http://www.igenet.com



정가 10,000원